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7, Jeonju*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for Localization

2017 9.21(목) - 9.22(금) 한국전통문화전당

Sep. 21.- 22. 2017,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주최



Local Futures
(국제생태문화협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목 차

■ 진행프로그램	6
■ 주요인사	8
■ 개최 취지문	18

CHAPTER 01 – 개막식

■ 개회사 : 오창환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장	23
■ 환영사 : 김승수 전주시장	25
■ 축 사 :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26
■ 축 사 : 민형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27

CHAPTER 02 – 해외연사 인사말

■ 싸이먼 리차드슨 (Simon Richardson)	31
■ 아냐 링백 (Anja Lyngbaek)	32
■ 그웬돌린 홀스미스 (Gwendolyn Hallsmith)	33
■ 사카타 유스케 (Yusuke Sakata)	34

CHAPTER 03 – 기조연설

■ 원리와 적용 : 희망의 비전-호주 바이런 샤이어 싸이먼 리차드슨 (Simon Richardson)	39
--	----

CHAPTER 04 – 주제강연 1

■ 로컬푸드 : 체계적 변화를 위한 솔루션 승수효과 아냐 링백(Anja Lyngbaek)	53
■ 지역 경제를 위한 지역 화폐와 투자 그웬돌린 홀스미스(Gwendolyn Hallsmith)	58

CHAPTER 05 – 워크숍 1세션 '지역의 미래'

■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싸이먼 리차드슨 (Simon Richardson)	68
■ 일본 슬로우 운동 사카타 유스케 (Yusuke Sakata)	72
■ 지역의 미래 이유진	74

CHAPTER 06 – 워크숍 2세션 '로컬푸드'

- 로컬푸드-저항, 재생 및 실천을 위한 교육 | 아냐 링백 (Anja Lyngbaek) 80
- 통합적 지역 먹거리 정책 | 강성욱 84

CHAPTER 07 – 워크숍 3세션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 지역화폐와 투자 | 그웬돌린 홀스미스 (Gwendolyn Hallsmith) 92
- 주빌리은행의 경험에 비추어 본 채무탕감 정책과 서민금융의 방향 | 유종일 109
-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검토 | 이재민 114

CHAPTER 08 – 주제강연 2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 홍종호 123
-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 윤난실 128
- 내 삶을 바꾸는 동네 정치 | 김영배 135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 진행 프로그램

9. 21. (목)			
09:00 ~ 09:30	등록		
09:30 ~ 10:00	개막식		2층 공연장
10:00 ~ 10:40	기조연설	· 원리와 적용 : 희망의 비전 - 호주 바이런 샤이어 / 싸이먼 리차드슨 (40')	2층 공연장
10:40 ~ 10:50	기념촬영 & 휴식		
10:50 ~ 12:00	주제강연 1	· 로컬푸드 : 체계적 변화를 위한 솔루션 승수효과 /아냐 링백 (35') · 지역 경제를 위한 지역 화폐와 투자 / 그웬돌린 홀스미스 (35')	2층 공연장
12:30 ~ 14:00	점심		
14:00 ~ 17:00	세션 1 '지역의 미래'	발제 싸이먼 리차드슨 사카타 유스케 이유진 좌장 임경수 패널 김재병 양준화	2층 공연장
	세션 2 '로컬푸드'	발제 아냐 링백 강성욱 좌장 김정섭 패널 김현곤 조경호 박수영	4층 교육실
	세션 3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발제 그웬돌린 홀스미스 유종일 이재민 좌장 엄영숙 패널 전대욱 엄영옥 박현정	4층 세미나실

9. 22. (금)

09:30 ~ 10:00	워크숍결과발표		2층 공연장
09:30 ~ 10:00	주제강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 홍종호(25') ·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 윤난실 (25') · 내 삶을 바꾸는 동네 정치 / 김영배 (25') 	
11:10 ~ 11:50	폐막식	· 폐막식 퍼포먼스 및 폐회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7, Jeonju

■ 주요인사



기조연설
사이먼 리차드슨
Simon Richardson

- (호주) 호주 바이런 샤이어(Byron Shire) 시장
- 생물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자문위원
- 前 바이런 샤이어(Byron Shire) 의원
- 환경과 대안문화 잡지 'Tribe' 창립
- 난개발 억제, 공동체 보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설계



주제연설
아나 링백
Anja Lyngbaek

- (덴마크) Local Futures의 프로그램 디렉터 및 International Alliance for Localization 코디네이터
- 멕시코 Veracruz지역 NGO인 "Microcuenca del Rio citlalapa" 공동창립자, 프로그램 디렉터
- 1986년부터 영국지방식량계획 (British Local Food program)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
- 식량, 농업, 현지화 및 환경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



주제연설
그웬돌린 홀스미스
Gwendolyn Hallsmith

- (미국) 미국 버몬트주 몬트필리어시 공동체개발 기획관
- Global Community Initiative 창립자 및 Public Banking Institute 고문
- 지역금융 전문가
- 새로운 통화프로젝트를 지역 수준에 맞춰 실행, 공공통화제도 주장
-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경제개혁에 관한 여러 권의 책 저술
- 저서 『Vermont dollars, Vermont sense』 Michael Shuman과 함께 집필 『지역화폐와 함께 지역공동체의 성장』



1세션 발제
사카타 유스케
Yusuke Sakata

- (일본) 킨기대학 산업이공학부 교수
- 경제학지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분야 지속가능성 평가
- 주요분야 : 삼림관리, 폐기물관리, 공정무역, 기후변화

■ 국내주요인사



김승수
전주시장

민선 6기 전주시장으로 재임 중이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시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 우선, 인간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실현을 통해 돈보다는 사람을,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육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지내면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두근두근 전주36.5도'가 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 현재 제10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의장과 제7대 후반기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등의 조례안을 발의에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대한국민대상 위원회가 주최한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정부문 대상과 언론인연합협의회, 대한민국신문기자연합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충효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활동 공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형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민선 5기, 6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연임하고 있다. 광산구는 '사람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을 슬로건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좋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좋아 자치공동체의 활력과 온기가 광산구민 모두에게 전달되는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전국의 기초자치 단체장을 사회적경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기획홍보위원장이면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광주대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목민관클럽 공동대표이다. 주요저서로는 '내일의 권력', '자치가 진보다'가 있다.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민선 5기, 6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연임하고 있다. 성북구는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경제, 마을민주주의 등 함께 행복한 동행(同幸) 패러다임을 지역 정책에 도입하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1기 사무총장, 2기 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사회적경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근 3년간 최우수상을 연속으로, 재임기간중 7번을 수상하였으며, 주요저서로는 '동네 안에 국가있다'와 '작은 민주주의 사람의 마을'등이 있다.

■ 국내주요인사



전체좌장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영국 뉴카슬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35년간 경제발전론,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을 가르치며 연구했고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에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재단(KRFD)을 설립해, 2014년부터 이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탄 행복의 비밀', '위기의 농협, 길을 찾다' 등이 있다.



2세션 좌장 **김정섭**
센터장

서울대학교에서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가족농, 귀농 등의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2017), "농촌의 사회적 경제 조직, 실태와 과제"(2016), "살림살이 전략으로서 다중경제활동과 농가의 분화"(2016), "농업 노동력 실태와 농업 노동시장 정책의 과제"(2015),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협동조합"(2013) 등이 있다.



주제연설 **홍종호**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경제학 교수다. 환경 경제와 지속가능경제 정책에 대해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거쳤다. 경제적·환경적 타당성을 결여한 국책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해 왔으며,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사회적 금융을 위한 (재)한국사회투자 이사, 환경시민단체인 환경정의 이사, 산업계와의 소통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제연설 **윤난실**
센터장

광주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이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마을, 사회적경제, 문화, NPO 등 서로 공생하고 호흡할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교육하며 주민참여 마을 플랫폼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원을 거쳐 올바른 학교 급식을 위한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518기념재단 기획위원, (사)지혜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사)북한이주민지원센터 이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 지도위원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 국내주요인사



1세션 발제 **이유진**
연구원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녹색당은 풀뿌리민주주의, 생태주의, 사회 정의, 탈성장, 비폭력과 평화 등의 정치 이념을 지향하는 당으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총괄간사, 환경부 친환경에너지전환 자문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2세션 발제 **강성욱**
실장

2010년 완주군에서 계약직공무원 근무를 시작으로 지자체단위 공동체지원농업(CSA),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 로컬푸드 현장조직 속에서 일하였다. 현재 전주시 재단법인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 프로젝트 "전주푸드2025플랜"을 실행하고 있다.



3세션 발제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며 슈빌리 은행 대표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중국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 위원, 노무현대통령후보 정책총괄,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경제 119', '유종일의 진보경제학', 'MB의 비용' 등이 있다.

■ 국제회의의 조직위원회



오창환
조직위원장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새만금 개발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중재안 제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운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동 의장이다. 그리고 현재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이며 지난 15년 간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전주가 전국에서 민관협력구조가 가장 잘 구축된 지역 중의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허문경
기획운영위원장

전주대학교 연구교수이며 관광학 박사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 지방정부정책에 대한 기획, 자문, 평가 활동을 한다. 논문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사회문화적 효과」, 번역서 『슬로라이프의 달인들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말하다』 등을 집필했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여사를 전주로 안내한 후,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정을 쏟아왔다.



고은하
위원

전주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웃을 도와 풍족하게 사는 복지세상을 꿈꾸고 있으며, 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연대로 지역사회에 노동 통합형 사회적 경제기업 복합체를 실현하고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전북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강소영
위원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로 설립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운동, 대중교통과 자전거 활성화 등 생태교통운동, 에너지절약과 가정햇빛발전소 에너지운동, 원도심교육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김창환
위원

공공작업소 심심, 사회적기업 이음에서 활동하며 원도심, 전통시장, 농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고 완주CB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과 실무를 배웠다. 현재는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속가능하고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장우연
위원

전주시 정책연구소 도시분야 연구원으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다가 희망제작소라는 시민사회 민간 싱크탱크에서 시민참여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 연구와 활동을 하였다. 작년부터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전주시에 와서 지역을 배우며 미래유산, 젠트리피케이션 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번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에서는 3세션 지역화폐 워크숍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병하
위원

전주시 의회 10대 의원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야생동식물 보호단 부총재, US 오픈 전라북도 태권도 감독·부단장, 대한태권도 협회 심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조례 등을 발의하는 등 전주시민과 공감하는 든든한 동행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엄영숙
위원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동아시아환경경제학회 이사로서 국제환경정책학회지 공동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노스켈로라이나 주립대학에서 환경경제학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환경영향의 두 수용체인 자연생태계 서비스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지역자원·자산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공유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경제순환 그리고 지역순환 등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심 있다.

■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이재민
위원

경제학박사이면서 응지세무대학교 부교수로 재임 중이다. 전북사회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이며, '더불어 함께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이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시장의 지배적 역할과 물물교환이나 교환의 원리가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성, 재분배, 가정경제 등의 원리가 어떤 사회를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 내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물교환의 원리 또한 다른 원리가 우세한 사회 내에서도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경제학(이타적 경제학)이 나아갈 방향과 대안들을 제시 하고 있다.



임경수
위원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이다. 환경공학 박사로서 사회적기업 이장 대표이사이며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상임이사로 활동중이다.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 이사장, 논산시 공동체경제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 워크숍 참여자



1세션 **김재병**
위원장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환경계획과 조경학을 배웠다. 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전주의제21을 거쳐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다. 탈핵, 새만금, 생태 분야를 담당한다. 생태계 복원을 직접 하고 싶어서 도중에 조경회사를 다니기도 했다. 전주시 에너지전환포럼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에너지전환에 참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세션 **양준화**
사무처장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면서 전라북도 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연구용역 시민참여팀장으로 활동했고 전라북도 에너지자립마을사업 컨설팅을 주관하고있는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전북지부 지부장이다.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참여하여 지역내 환경, 사회, 경제 등 지역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천해 가고 있다.



2세션 **김현곤**
보좌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의실 보좌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조직국장,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정책실장,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추진단 사무국장,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조직교육국장, 경기도 학교급식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김포시농민회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농민운동과 학교급식 운동, 협동조합운동을 바탕으로 민관협치 조직인 농어업회의소의 경험을 거쳐 정당운동과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 농촌 먹거리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세션 **조경호**
연구원장

(사)지역농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민운동에도 헌신하였으며, 농업정책 연구에 관심을 갖고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지역농업조직화와 내발적발전론에 의한 농촌산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 워크숍 참여자



2세션 **박수영**
사무국장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이면서 (사)한알마을 상임이사로 활동중이고 원주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지역농업, 로컬푸드, 협동조합, 사회교육 등에 관심이 많고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활동가이다.



3세션 **전대욱**
센터장

카이스트 경영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장,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 공동대표, 한국시스템다이나믹스학회 부회장, KCI 등재학회지 편집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의를 가지고 활동 중이다.



3세션 **엄영옥**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민관협의회 위원, 전북혁신학교 심사 평가 및 컨설팅 위원, 학교자치추진위원회, 교습비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하며 교육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자치와 아이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향하고, 혁신 교육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의 인지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사회적 안전망인 복지가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예방적 복지를 펼쳐야 함에 초점을 두고, 시민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실천으로 지역 발전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됨을 목적으로 하는 전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3세션 **박현정**

전주시 복지분야 정책연구원이다. 전주시는 소수자 인권을 기본으로 하되 전주 시민 모두의 보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가책임의 복지를 공고히 하면서 공동체 활력을 복원하여 관계와 나눔을 통한 복지주체성 또한 확보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는 주민 참여와 성장을 통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전주시정책연구소에서는 인권에 기반한 사람중심의 따뜻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최 취지문

JEONJU CITY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개최 취지문

Purpose Statement of Host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7 Jeonju

전주시는 경제의 지역화를 통해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을 모색하고자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국제생태문화협회인 Local Futures(ISEC) 및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주최합니다. 이는 전주시가 세 번째 주최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이자 로컬 퓨처스가 전 세계에서 펼치는 13번째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입니다. 전주시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연례로 개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로컬경제로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분명한 신호이며, 또한 국내외에 로컬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기치를 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전주시의 시민과 행정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Je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지난 20여 년 간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부제를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로 정하고, 시정의 목표와 비전을 생태도시 구축과 공동체성의 회복에 두고 있는 민선6기 전주시 행정과 시민사회 간에 보다 긴밀한 협치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싸이먼 리처드슨 Simon Richardson, 아냐 링백 Anja Lyngbaek, 그웬돌린 홀스미스 Gwendoly Hallsmith, 사카타 유스케 Yusuke Sakata씨 등 지역화분야의 권위자들을 해외연사로 모시고 강연회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워크숍의 각 세션에서는 '지역의 미래', '로컬푸드'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금융'을 주제로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를 중심으로 한 토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호주 바이런 샤이어 Byron Shire 시장은 지역에너지 정책 10개년 계획과 부탄왕국의 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정책수립의 도구로 도입한 사례를 기초강연하고, 워크숍에서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지역행정에 적용하여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냐 링백 씨는 전 세계적인 식품과 농업의 선도적인 지역화운동 단체들을 소개하며 기업중심의 글로벌 성장경제에 저항하는 동시에 지역을 되살리는 해법을 강연하고, 멕시코에서 지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워크숍을 통해서 선보일 것입니다. 그웬돌린 홀스미스 씨는 자신의 저서를 바탕으로 미국 등 지역화폐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구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용 게임을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카타 유스케 교수는 일본의 슬로라이프 운동의 맥락에서 전환마을 transition town,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대체에너지 도입 사례를 워크숍에서 소개할 것입니다.

이상의 프로그램을 국제회의의 1일차로 진행하고, 2일차에는 각 분야 국내저명인사를 모셨습니다. 좌장 오창환 교수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Jeonju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공동의장이자 전주시 생태도시기본계획의 연구책임자로서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논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이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인 홍종호 교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략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광주광역시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윤난실 센터장은 마을공동체 · 사회적경제 · 주민참여플랫폼 · NPO문화를 아우르는 중간지원조직의 거버넌스 사례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의 전임 의장으로서 선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국제회의에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함께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7, Jeonju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for Localization

CHAPTER 01

개막식 인사말

-
- (개회사) 오창환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조직위원장
 -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 (축 사)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 (축 사) 민형배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개 회 사



오 창 환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조직위원회 위원장

전주에서 3회째 개최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7 전주"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연사 및 참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의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오늘 내일 이틀간 함께 발표와 토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주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와 전 세계가 행복의 경제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1, 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통해 국내외의 많은 지방정부가 행복의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올해 3회째 열리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7 전주"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여러 지역들의 행복한 미래 건설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우리 대부분은 행복을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국내 그리고 국제적으로 과다해 지는 경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과다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운동하지 하지 않게 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화시설을 얻는 것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인간성은 파괴되고 우리는 행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행복을 파괴할 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파괴를 유발하여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체에게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으며 세계 경제를 붕괴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저개발 국가는 기아와 경제 파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북극의 꿈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곧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중산층이 파괴되어가고 있으며 일부 기업과 자산가들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어감으로서 전 세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7 전주"에서는 1, 2차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목적으로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논의 분야로는 2차년도에 이어 지속가능한 도시에 필수적인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Local Food가 그 한 분야이며 또 다른 분야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금융'입니다. 'Local Food'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지역에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지역의 농업과 유통을 활성화시켜 직장을 창출하고 농산물

장거리 유통에 들어가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는 종합적 방안이 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금융'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역 구성원들의 경제적 상생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이 추구될 것입니다. 또한 본 국제 회의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경제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이 추구해야 할 행복의 경제학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전주 시장님, 지방정부 협의회장과 관련 공무원 분들 그리고 로컬 퓨처 사무국 관련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회의 준비를 위해 7개월간 회의를 주관한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를 도와주신 여러 단체에도 감사를 드리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환영사



김승수

전주시장

우리 모두는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에 대한 모두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는 눈부신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만족하며, 양적인 성장이 곧 우리 모두가 바라는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줄 거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질수록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빈부격차, 환경파괴, 공동체 붕괴 등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적 성장의 속도는 점점 증가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오히려 줄어들어만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이러한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사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신뢰와 협력, 그리고 호혜와 연대를 통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지향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 대기업 등에 집중된 경제 권력을 분산시켜 경제민주화에 힘을 보탬니다. 그래서 승자독식과 무한경쟁의 시장논리가 아닌,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따뜻한 경제를 추구합니다.

사람냄새 나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주목하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주는 대한민국 '행복의 경제학'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9월 20일부터 사흘 간 진행되는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가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설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오늘, 예향의 도시 이곳 전주에서 <제 3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2017 전주 행사>가 개최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멀리에서 와주신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회에 걸친 국제회의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명실상부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거듭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날로 물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으며, 욕망의 재생산과 천편일률적인 산업화 속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휴머니즘을 잃고 서로가 서로를 단절한 채 행복이 아닌 불행의 경제학에 매몰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소통을 통한 인간성의 회복과 나눔으로서 더욱 행복해지는 경제학의 연구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능성 개발과 사회적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행복한 경제학을 널리 알리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모두의 지혜와 관심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2017 행복의 경제학 컨퍼런스-전주' 개막을 축하합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민형배입니다. 협의회 회원도시인 35개 지역정부를 대신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공동주최자인 협의회는 사회적경제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인 전국 지역정부의 행정협의회입니다. 전주시도 회원도시로 협의회와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로컬 퓨처스(Local Futures)의 헬라나 노르베리-호지(Helena Norberg-Hodge) 대표는 '지역화(localization)'를 강조했습니다. 세계화가 몰고 온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를 지역에서 찾자고 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로 이 지역화를 풀고 있습니다. 지역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협의회 지역정부들은, 지금까지 시민의 삶터인 지역 현장에서 대한민국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이 지역화의 핵심을 확인했습니다. 지역민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지역은 열린 미래로 나아간다, 지역사회가 중앙의 변방이 아닌 또 하나의 중심일 때 지역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주체다, 결론 내렸습니다.

나아가 지역과 자치분권에 가장 잘 조응하는 경제시스템이 사회적경제라 합의했습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전역에서 사회적경제의 모범을 세우고 공유·확산에 힘을 기울인 이유입니다. 오늘 전 세계의 지역과 사회적경제 주체, 석학 앞에서 그 노력의 일부를 함께 공유합니다. 많은 응원과 함께 애정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도, 사회적경제도 시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많은 시스템은 중앙과 일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역이 모두를 위한 방법을 제시할 때입니다. 지역의 생각과 경험을 동력삼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열정이 컨퍼런스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세계적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승수 시장님과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국내외에서 귀한 걸음해주신 전문가와 사회적경제 주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학습과 연대가 진보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7, Jeonju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for Localization

CHAPTER 02

해외연사 인사말

-
- 사이먼 리차드슨 (Simon Richardson)
 - 아냐 링백 (Anja Lyngbaek)
 - 그웬돌린 홀스미스 (Gwendolyn Hallsmith)
 - 사카타 유스케 (Yusuke Sakata)

인사말



**사이먼
리차드슨**

Simon Richardson

안녕하세요 전주시!

'완벽한 지역' 전주시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주와 바이런 샤이어(Byron Shire)는 축제와 행사의 중심지이자 관광도시이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회복력을 높여온 전주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지역 에너지, 의사 결정, 협동 및 공동 주택 분야는 물론 소규모 농장과 농경 방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감지됩니다. 세계적인 동일화, 중앙집중화, 무권력화에 맞서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영감을 주고받고, 성공 스토리와 저항 신호를 공유하고,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흐름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마을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을은 면적과 인구 모든 측면에서 작은 마을이지만 희망의 불빛을 제공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세계 등대 마을의 중심지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아나 링백

Anja Lyngbaek

먼저 전주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주에 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여러분의 비전과 경험을 전세계에 알리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전세계 주요 미디어가 기업화되어 글로벌 소비자 문화에 대한 체계적 대안을 언론에서 접하지 어렵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대체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주 스토리가 전세계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의 건강하고 강력한 지역 경제 구축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수십 년간 헌신해온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로컬푸드는 사람들을 모으고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화 운동을 선도합니다. 이들 지역화 운동은 사람들의 서비스 활동을 중심으로 자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은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보다 지역 시장의 수요를 먼저 고려합니다. 공정 경제 구축에서 식품과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식량안보에서 중소 농민들의 중추적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경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상식과 실제 경험, 지역 기반 지식과 기량을 무시하고 전문화에 집중하고 협소한 전문가에 맹목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덕분에 정보가 풍부해지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더욱 현명해지거나 인류와 지구의 웰빙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업 중심의 파괴적 경제 모델은 물론 협소한 전문화에만 의존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지역의 요구와 조건, 지식 및 기량을 고려하여 다양성과 전체론적 사고를 포용하고 일반 상식을 의사 결정의 기본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전주 회의에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그웬돌린
홀스미스**

Gwendolyn Hallsmith

안녕하세요.

전주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과 경제는 한 문장에서 같이 사용되기 어려운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둘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에서 경제학은 우울한(dismal) 학문으로 불립니다. 우울은 행복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소득으로 식량, 의복, 주택, 교통, 교육, 건강 등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기 어려울 때 경제학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지역 사회를 돕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의 웰빙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21세기 들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기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제도, 관습, 법률, 기업 및 정부의 사업 계획, 전통, 시스템은 그 중심에 인간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징과 패턴을 보여줍니다. 문명화와 그 습관은 열역학 2법칙과 달리 인간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를 바꿔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주시는 진정으로 행복한 지역 경제에 도전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전주시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계와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주시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인사말



사카타 유스케

Yusuke Sakata

전주시민 여러분께,
2017 전주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015년 제1회 회의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전주시의 노력과 성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2015년 회의에 참석해 전주시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분야를 확립하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온 전주시의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또한 전통 구역과 문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사회경제 분야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행복의 경제학을 연구하고 실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일본 구마모토는 작년 큰 지진이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지역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아직까지 사업을 재개하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은 지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고 작년 지진은 우리 지역 경제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구마모토성을 포함하여 오늘날 재건하기 어려운 전통 건물이 다수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마모토는 이들 전통 건물 없이 지역 문화와 경제를 유지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번 국제회의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일본 긴키대학교 후쿠오카 캠퍼스에서 환경 경제학과 지역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주 방문 후, 저는 후쿠오카 이이즈카 시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시작하고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캠퍼스 농장은 저희 학생들에게 공정 무역과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알려준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화 경제와 에너지 현지화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지역화는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에너지원, 특히 바이오매스와 태양열에 기대가 과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회의를 기회로 에너지를 지역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너지원의 지역화는 재정과 고용 측면에 모두에서 지역적 승수 효과를 갖기 때문에 지역 에너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지역적 승수 효과는 인정하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예측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영국은 전통 기법보다 쉽게 지역 경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지역 승수 효과 3(LM3)에 대한 추정치를 제안했습니다.

전주시가 지역화 효과를 수치적으로 추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7, Jeonju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for Localization

CHAPTER 03

기조강연

-
- 원리와 적용 : 희망의 비전 | 호주 바이런 샐리어
사이먼 리차드슨(Simon Richardson)

원리와 적용 : 희망의 비전

싸이먼 리차드슨
(Simon Richardson)

식물학자이자 발명가이며 환경운동가인 일명 '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 카버 (George Washington Carver)는 "비전이 없는 곳에는 희망도 없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현재 전 세계 주, 지역, 마을 공동체가 당면한 과제가 정확히 요약되어 있다.¹⁾

오늘날 전 세계는 무한 경쟁과 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우리 모두는 경쟁적 적대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 의사 결정의 편재성과 글로벌 경제 머신이 소규모 소비주의를 집어 삼키는 경제 시장에 익숙해져 있다. 다른 패러다임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협력과 안정적 경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기에 도전하여 그 영향력과 중요성을 높여가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협력과 경제적 지역주의 개념에 기반한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아이디어, 프로젝트, 사례 연구 및 영감)을 통해 또 다른 방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바이런 샤이어에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바이런 샤이어

바이런 샤이어(Byron Shire)는 지역명인 동시에 이상을 의미한다. 바이런 샤이어는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던 리버스 지역에 속하며 호주 최동단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566.7평방 킬로미터(218.8 sq mi) 이고 인구는 31,556명이다.²⁾ 바이런 샤이어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윤아열대 생태지역 중심부에 위치하며 생태계, 종, 유전적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다. 또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동서부 및 극북 퀸즐랜드 습윤열대 지역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풍부하고 다양한 동식물상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런 샤이어 지역 경제는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특히 바이런 베이(Byron Bay)가 유명하다. 연평균 2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5억 달러 이상을 소비한다.³⁾

바이런 샤이어는 고용 불안, 주택구입능력 부족, 정체성 상실, 주 및 연방 정부 수준의 거버넌스 제도로 공동체 자체의 의사결정과 지역의 특성 무력화 등 경제적/문화적 정체성 세계화로 인한 문제를

1) https://en.wikipedia.org/wiki/George_Washington_Carver

2) http://www.censusdata.abs.gov.au/census_services/getproduct/census/2016/quickstat/LGA11350?opendocument

3) <http://www.byron.nsw.gov.au/tourism-research-and-resources>

공유하고 있다. 또한 연간 2백만 명이 찾지만 실제 주민은 32,000명에 불과한 작은 연안 관광 도시라는 특수성에서 발생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바이런 샤이어의 과제는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공공 공간을 지켜내는 것이다. 바이런 샤이어 주민들은 전세계 그리고 세계 속의 바이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지역 역량 강화, 지구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명예롭고 지속 가능하고 정중한 생활 방식에 대한 비전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대담한 비전을 추구해온 덕분에 바이런 샤이어에는 세계화 및 '대안이 없다'라는 편협한 생각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많다. 샤이어 주민들은 패스트푸드 체인점, 고층 또는 교외 스프롤 현상,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환경 파괴에 저항해왔다. 더불어 영속농업 토지사용운동, 공동거주 공동체와 같은 공동생활시설, 대체의학과 건강수칙 등을 선도해왔으며 호주에서 녹색당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제시된 것을 수용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또한 획일화에 저항하고, 보다 나은 지역과 지구에 대한 비전, 비전을 실천하는 행동, 주민들과 공동체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공동체에 영감을 부여한 것도 바로 이 대담성이다.

■ 에너지 지역화

에너지 지역화는 바이런 샤이어가 특히 약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현재 호주 에너지 부문은 기업 독점 방식의 전통적인 경제 체제, 화석연료발전, 매우 비싸고 중앙화된 에너지 공급 및 소매 체인점 등이 일반화되어 있다. 바이런 샤이어 주민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지역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유하고 이용하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런 샤이어의 생각과 가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15년 바이런 샤이어 의회는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바이런 샤이어에 태양열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하여 최소 10%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20년간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의회는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 이유는 첫째,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정점에서 현재 글로벌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안보의 통제권을 다른 글로벌 기업으로 단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어 샤이어는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유하고 이용하는 분산형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실현되기 어렵다.

둘째, 오늘날 에너지 혁명에서 20년은 마치 평생과도 같다. 바이런 공동체는 대부분 20년 내에 주민들이 각자의 주택에서 각자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실제로 노던 리

버스 지역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호주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주목 받고 있다.⁴⁾ 따라서 자체 에너지 안보와 전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의회는 그 자체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공동체를 대표해왔다. 특히 재생 에너지 생산 장려와 가격 책정 문제에 집중하여 에너지 지역화에 대한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의회는 재생 에너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체가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와 솔루션을 점차 늘려왔다. 이러한 전환은 무공해 바이런(ZEB: Zero Emissions Byron)의 가장 확실한 결과이다.

무공해 바이런

무공해 바이런(ZEB: Zero Emissions Byron)은 내가 비욘드 제로 에미션(Beyond Zero Emissions) CEO를 만나 호주 전역과 지역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2025년까지 바이런 샤이어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토타입으로서 ZEB 설치 계획을 수립한 2015년 3월 시작됐다. ZEB는 또한 무공해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공동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경제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가능하면 중앙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했다.⁵⁾ ZEB는 단순히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증대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해 건물, 운송, 토지이용 및 폐기물 등 지역 전역의 주요 배출원을 고려한다.

비영리 자선 단체 '제로 에미션 바이런 리미티드(Zero Emissions Byron Limited)'가 설립됐다. ZEB는 1 에너지, 운송, 건물, 토지 이용, 폐기물 부문의 현재 배출 기준 산출, 2 10개년 실천 계획 개발, 3 에너지 효율, 옥상 태양열 패널 설치와 같은 단기 활동 및 무공해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전략 이행, 모니터링 및 조정 등 프로젝트 3단계에 집중했다.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공동체 구성원은 2015년 8월까지 5개 분야별 실무그룹에 참여를 신청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5개 자원봉사 실무그룹은 지역 전역의 배출원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각 부문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기준을 수립하는 프로젝트 1단계를 시작했다.

ZEB는 2016년 5월 1단계를 완료했다. 에너지 기준을 산출한 결과 연간 134,967톤 CO₂e, 일인당 8톤 CO₂e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 평균의 절반, 세계 평균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⁶⁾

현재 프로젝트 2단계를 진행 중이며, 이 중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실천 계획은 완료됐다.

4) <http://pv-map.apvi.org.au/historical#4/-26.67/134.12>

5) <https://zerobyron.org>

6) zen stuff

ZEB는 2025년까지 바이런 샤이어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재생 에너지 조합과 에너지 효율을 확인하고 이행하기 위해 보고서를 의뢰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역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공동체 그룹과의 교류를 넓혀나가고 있다. ZEB는 재원을 조달하고 다른 분야의 실천 계획을 개발하는 역할을 의회에 할당한 의회 결의안이 최근 통과되면서 의회와 함께 공식적으로 리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동체 참여 및 의회와의 풀뿌리 협업은 앞으로도 ZEB의 필수 요소로 자리를 지킬 것이다. 공동체 그룹은 기존 인벤토리 개발을 주도하고 ZEB의 핵심 부분이 되어왔다. 또한 우산 그룹으로서 배출 경감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촉진하는 두 가지 주요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에노바(Enova)

에노바 커뮤니티 에너지(Enova Community Energy)는 호주 최초 그리고 유일한 공동체 소유의 에너지 소매업체이다.⁷⁾ 에노바는 바이런 샤이어에 기반을 두고 노던 리버스 지역 주민이 지분의 75%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공동체가 재생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공동체에 수익이 돌아가도록 돕는다. 수익의 50%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해 소매업체 에노바 에너지(Enova Energy Pty Ltd)뿐 아니라 비영리 사업적 기업 에노바 커뮤니티(Enova Community Ltd)를 자선 단체로 등록했다.

에노바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에너지 절약 공동체를 수립하고, 지역 수익과 일자리를 유지하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모든 사회경제적 그룹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공급 모델을 수립하고, 다른 지역에서 재현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에너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에노바 이사회의 앨리슨 크룩(Alison Crook) 의장은 "우리의 비전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미래 에너지는 재생 가능하고 분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생 에너지와 저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비용이 감소하면서 소비자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이상 기후와 자연 재해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⁸⁾

에노바는 18개월 동안 개념 정의, 실행가능성 조사, 사업 계획 수립, 소매 면허 신청을 진행하고 1100명의 투자자로부터 4백만 달러 자본을 모금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직원을 채용해 교육시키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테스트했다. 에노바는 지난 12개월 동안 3천명 이상의 고객에 서비스를 제공해왔

7) <https://enovaenergy.com.au>

8) Alison Crook, in Conversation with the author, July 24, 2017

으며 향후 12개월 동안 고객 규모를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⁹⁾ 에노바는 현재 사용 및 판매하는 전기의 40% 이상을 지역 옥상 태양광 패널에서 구매하고 있다.

현재 에노바는 바이런 의회 및 유통업체 에센셜 에너지(Essential Energy)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획 중인 솔라 가든(solar garden), 사회 주택 공급자와 협력하여 태양열 패널을 직접 설치할 수 없는 이들에게 태양열 혜택을 제공하는 주거용 태양열 프로그램, COREM과 협력하여 멀럼빔비 밸런스즈 로드 에 위치한 의회(Council on Council) 토지에 설치한 공동 태양열 농장 등 3개 전기 생산 시범 사업을 개발 중이다.

지역에서 에너지를 관리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에너지 시장은 복잡하고 규제기관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끊임없이 막대한 로비를 받고 있다. 또한 높은 네트워크 비용을 부과하는 고가의 네트워크와 배전망을 보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전기 요금의 50%를 구성하기도 한다. 에노바 정도의 소규모 소매업체는 에너지 도매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에너지 비용을 보면 2016 년 MGhr 당 평균 65 달러에서 2017 년 상반기 최고 140달러까지 치솟으며 평균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들 문제는 정부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후 변화 정책 부족과 재생 에너지 전환 지연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투자 수익률 모델 제작 시 이는 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생활 습관이다. 공동체 소유라는 개념 자체에는 환영 받을 수 있지만 노던 리버스와 같이 진보적인 지역에서도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공동체는 에노바와 같은 단체의 도움으로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을 순환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소유 재생에너지 | 멀럼빔비(COREM)

공동체 소유 재생에너지 멀럼빔비(COREM: Community-Owned Renewable Energy Mullumbimby)는 멀럼빔비 지역의 100% 재생에너지를 추구하고 촉진하기 위해 공동체 소유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비영리 공동체 활동 그룹이다. COREM은 에노바와 같이 공동의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 미래의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지역에서 석탄층 가스 채굴 저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소그룹 회의를 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 책임, 영감을 주는 리더십에 대해 논의하고 COREM을 구성했다. COREM은 공동체 참여와 소유권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수해구제금 11,000달러와 지역 사회 파트너를 위한 모금액 11,000달러를 사용해 태양열/배터리 대량 구매 계획을 지원했다. 경쟁을 통해 110명의 참가자가 424kW의 태양열과 600kWh의 저장

9) Enova Shareholder Update July 2017

용량을 구매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에노바 고객으로 서명했다.¹⁰⁾

COREM은 출범 후 마을 회관과 공동체 건물 옥상에 공동체 소유의 태양열 프로젝트 4개를 설치했다.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총 48,000 kWh의 전기를 생산한다.¹¹⁾ 절감한 전기요금은 COREM의 회전형 공동체 에너지 펀드와 공동체 그룹에 배당된다.

COREM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첫 번째 회의에서 결정된 멀럼빔비 수력발전소 재가동이었다. 멀럼빔비 수력발전소는 1925년 12월 가동을 시작해 1990년 폐쇄됐다. 당시 "수요일 밤 멀럼빔비에 처음으로 전깃불이 켜지자 마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¹²⁾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늘날 수력 발전에 대한 비전은 다시 한번 지역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제안서는 멀럼빔비 지역(그리고 가능하면 인근 지역)에서 최소 51% 소유하고 수력 발전을 통해 최대 1MW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공동체 소유 기업을 제안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지만, 프로젝트는 ARENA(호주의 주요 재생에너지 펀드기관), 5개 주 정부 당국과 부처, 의회, 배전망 소유주, 찰스 스타트 대학교, 지역 자선사업가, COREM과 협상 중이다.

물사용 허가와 관료주의는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참석한 2017년 7월 27일 회의부터 최대 장애물이 되어 왔다. 현재 수력발전 제안서는 크기를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1Kw 시스템이라도 호주의 스노위마운틴 수력 발전 계획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모든 단계를 통과하고 승인을 받더라도 수력 평가부터 설치, 운영까지 환경유산청(Office of Environment and Heritage)에서만 19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행히 COREM과 이해관계자는 강건하고 탄력적이다.

교훈 및 예시

의회 및 공동체 주도 단체와 기업(예: ZEB, COREM, 에노바)은 샐리에에 재생 가능한 지역 전력을 공급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9월 의회로부터 추가 개발을 공식 지원 받는 밸런스즈 로드 하수 처리장은 공동체 중심의 협력적인 개발 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밸런스즈 로드 프로젝트는 산업체와 협력한 바이오매스 농작물 경작지와 바이오 에너지 발전 장치, COREM 및 에노바와 협력한 태양열 농장, 공동 주택과 저렴한 주택 지원 기관 및 산업계 지도자와 협력한 저렴한 주택 구역, 지역의 환경 및 토지 보호 단체와 협력한 대규모 생물 다양성 개선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http://www.corem.org.au>

11) <http://www.corem.org.au/projects-2/>

12) <http://www.environment.nsw.gov.au/heritageapp/ViewHeritageItemDetails.aspx?ID=5060490>



그림 3: 벨런스즈 로드 프로젝트 구역 및 활동(안)

2016년 5월 24일 의회, 에노바 및 COREM은 프로젝트 비전과 각 당사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지역 에너지 분산화와 민주화에 대한 샐리아의 열광적인 반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첫째, 행동에는 의욕이 필요하다. 에너지 부문의 많은 개별 기업이 의욕을 가지면(바이런의 경우 10년 만에 순배출 0) 실무자들이 원하는 비전과 공동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모두가 필요한 공동의 행동 방향과 형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과 파트너십을 모색하는데 추가적인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 소유권은 성공의 열쇠이다. 의회 단독으로는 번거로운 규제 및 입법 절차(그림 1의 수력 발전 사례 참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어렵다. 지역 사회는 자체 전문성, 전문가, 옹호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제공한다. ZEB 이사회에는 국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다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에노바 이사회 역시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OREM은 학자들과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또한 모든 의회 프로젝트는 공동체 바이인(buy-in)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바이런은 지역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고, 또 추구해야 하며 활동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공유해야 한다. 바이런은 머리와 가슴, 의지, 즉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안을 반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과 활동가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E.F. 슈마허는 이를 "나는 우리

와 이 배를 더 나은 세상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바람을 내 스스로 일으킬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그 바람에 편승할 수 있도록 뜻을 세울 수는 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다.¹³⁾

■ 계획 지역화

앞서 소개 시간에 세계화로 인해 표준화, 조직화 및 획일화가 심화되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동시에 공동체, 주, 국가가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바이런 샤이어 의회가 진행 중인 10개년 공동체전략계획(CSP: Community Strategic Plan) 개발 작업에 잘 드러나 있다. 의회는 2017-2018년 주요 검토 및 협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 가치, 우선순위 및 비전을 명확히 정의하고 새로운 공동체전략계획 2028을 준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부탄의 국민총 행복 지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부탄은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사용해 웰빙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국민의식을 제고한다.¹⁴⁾ 행복에 대한 부탄의 개념은 순간의 즐거움을 행복으로 인식하는 서양의 개념과 달리 웰빙을 잘 설명한다.

부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GNH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모든 정부 법안과 정책은 내각에 제출되기 전에 GNH위원회(GNHC)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GNH 지표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여 경제적 번영 또는 개별 정책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회생태적 이익에 가장 적합하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4개 GNH 요소 즉,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사회 경제 개발, 문화 보전 및 진흥,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우수 거버넌스는 부탄 발전의 길잡이다.

Excel 도구는 GNH 심사 과정의 핵심이다. GNH위원회는 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GNH 렌즈를 통해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초안을 평가하고 검토한다. GNH 심사로 최종 승인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9개 GNH 영역과 22개 변수의 범위에서 모든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권장안과 피드백을 제시한다.

13) <http://www.schumacherinstitute.org.uk/small-is-powerful-e-f-schumachers-ideas-in-the-21st-century/>

14) For information about GNH in Bhutan see <http://www.gnhc.gov.bt> , www.grossnationalhappiness.com.

표 1_GNH 심사 지표

9개 GNH 영역	22 GNH 변수
1. 생활 수준	자산, 경제 안보, 물질적 웰빙, 생산적인 활동 참여
2. 좋은 거버넌스	의사결정 기회, 반부패, 법적 수단, 권리, 성별, 투명성
3. 교육	기술 및 학습
4. 보건	공중보건
5. 생태	수질 및 대기 오염, 토지 황폐화, 생물다양성
6.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적 지원, 가족 상호작용
7. 시간 사용 및 균형	여가
8. 문화	문화, 가치
9. 심리적 안녕	영적 추구, 스트레스

심사 과정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경로를 따른다. 먼저 기관 내에서 관련 기술/자격을 갖춘 이들로 구성된 다양한 그룹을 구성한다. 여성, 아동, 대학, 환경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좋다. 최소 15명의 참가자가 심사 결과를 통합하여 기관에 제출한다.

심사 자체는 명확하고 일관된 채점 제도를 따른다. 22개 선택 변수 각각은 1점에서 4점까지 척도로 평가된다. 4점 척도는 부정적인 경우 1점, 불확실한 경우 2점, 중간인 경우 3점, 긍정적인 경우 4점을 부과해 부정적인 평가부터 긍정적인 평가까지 가능하다. 정책이나 프로젝트는 변수 당 평균 3점을 받아야 하므로 22개 변수를 모두 평가한 후 66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바이런 샤이어에 GNH 심사 도구 적용

2016 년 지방 정부 계획 시스템에 GHI 계층을 적용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찰스스튜어트 대학(CSU: Charles Sturt University) 농촌 및 지역 공동체 주도 연구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연구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 문화 교류 개발과 바이런 샤이어와 부탄의 관계 강화 계획, 호주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지속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 웰빙 중심의 계획 수립 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 확인, 의회가 바이런 샤이어에서 이들 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확인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프로젝트 완료 후 보고서는 "부탄의 GNH를 제고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각 영역과 변수는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속 가능성과 웰빙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공동체는 GNH 개념을 사용해 의회가 바이런 샤이어의 웰빙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부탄과 마찬가지로 GNH를 바이런 샤이어의 웰빙 또는 행복을 증진하는 작업을 설정하는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체와 협력하고 CSP

주제와 목표가 반영된 GNH 도구를 사용하여 모든 새로운 BSC 정책과 프로젝트를 심사함으로써 공동체에 의회가 모든 결정 과정에 GSP를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공동체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사례 연구 #1 공동체전략계획

공동체전략계획(CSP: Community Strategic Plan)은 의회가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의회 계획과 운영에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CSP는 공동체 계획이므로 CSP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이런 샤이어는 공동체의 제안을 채택할 경우 이들이 바이런 샤이어의 '행복(웰빙)'을 증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GNH도구를 사용하여 평가 과정을 구조화할 수 있다. 이는 심사 도구를 사용해 각 제안을 평가하고 평가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받았는지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리고 바이런 샤이어의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제안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점수가 가장 높은 이니셔티브를 채택할 수 있다.

바이런은 계획 주제에 맞춰 비교적 간단하게 GNH 심사 도구를 수정할 수 있다. 의회의 경제 주제에 관한 다음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전략계획의 5개 핵심 주제와 이들의 목표는 GNH 심사 도구 영역과 변수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CSP	GNH
공동체의 우려와 우선 순위 "...지속 가능한 관광 장려,...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다양한 산업 개발..." (p.23)	영역 : 생활수준 변수 : 경제 안보, 물질적 웰빙, 생산적인 활동 참여
공동체 결과 자연 환경과 공동체 가치를 존중하고 알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영역 : 생태 변수 : 수질 및 대기 오염, 토지 황폐화, 생물다양성 영역 : 문화 변수 : 문화, 가치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두 계획 과정 간 시너지 효과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한 가지 사례만 소개했다. 각 주제와 구체적인 결과, 목표, 우선 순위 및 관심 사항은 GNH 영역 및 변수와 일치한다.

사례 연구 #2 2025년 순배출 제로

연구 프로젝트는 저탄소 전략의 일환으로 2025 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한다는 의회 정책에 심사 도구를 적용했다. 정책은 총 77점을 받았고 아래는 심사 도구의 일부 채점 방식을 보여준다.

표 2 GNH 도구 변수 및 채점 사례 - 사례 연구 2025 바이런 제로 배출

GNH 영역	GNH 변수	점수	이유
생활수준	자산	3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제 안보	4	경제적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물리적 웰빙	3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생산적 활동 참여	4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대할 수 있다.

바이런 제로 배출 2025 전략은 총 66점을 받아 바이런 샤이어의 웰빙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는 프로젝트가 반드시 채택된다기 보다는 전략 채택과 이행을 지지한다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변수 또는 영역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없으므로 완화 조치 없이 전략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로 전진

위 연구와 사례 연구를 통해 GNH 심사 도구가 공동체 자체는 물론 계획 전략에 대한 공동체 소유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BSC 계획은 물론 정책 목적 즉, BSC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바이어 샤이어의 웰빙 증진에 맞춰 심사 도구를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도구를 적용하여 의회가 공동체를 대표하므로 공동체는 정책 및 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최근 의회는 의사 결정을 알리기 위해 2017-2021 딜리버리 프로그램에 웰빙 개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로 가결했다.¹⁵⁾ 이는 지속적인 보고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기준 웰빙/행복 측정으로 새로운 CSP의 핵심 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HI: Gross Happiness Index)는 국내외 다양한 웰빙 및 행복 프레임워크와 더불어 이번 믹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새로운 CSP는 성공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웰빙/행복을 선도하고 중심자적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바이런 샤이어는 세계화된 '경쟁'과 '영구 성장' 모델에 지속적으로 저항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통적 방식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15) http://www.byron.nsw.gov.au/files/publications/delivery_program_2017-2021_and_operational_plan_2017-2018.pdf.

사용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프로젝트와 활동 외에도 현재 다양한 제안과 행동, 계획,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런즈윅 에코마을(Brunswick Eco Village)¹⁶⁾과 에코 공원 태양광 슈레버 공원(Eco Park Solar Schreber Garden, 지역의 배전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치된 약 8ha 규모의 5MW 태양광 PV 및 1MWh 공동체 배터리 저장 은행¹⁷⁾)은 공동체 주도적 비전을 실현한 주요 에너지 지역화 사례로서 집단적 과제에 집단적 해결안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바이런 샤이어에서는 공동체 주도적 의사결정, 공동체 중심의 토지신탁, 공동체에 유익한 농업 계획, 공동체 운송 프로그램 및 공동체가 설립한 경제 및 사회 센터 등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에 눈을 돌리고 샤이어 내부의 프로세스와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비전이 없는 곳에는 희망도 없다'라는 조지 워싱턴 카버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바이런 샤이어에서 공동체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담하고 끈질긴 행동으로 지역화되고 민주적인 제도에 대한 상상력 넘치는 새로운 개념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전 세계의 많은 공동체가 이 여행을 함께하기를 바란다.

16) <http://brunsecovillage.com.au>

17) <http://byronecopark.com/index.php/e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7, Jeonju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for Localization

CHAPTER 04

주제강연 1

-
- 로컬푸드: 체계적 변화를 위한 솔루션 승수효과
아냐 링백(Anja Lyngbaek)
 - 지역 경제를 위한 지역 화폐와 투자
그웬돌린 홀스미스(Gwendolyn Hallsmith)

로컬푸드 : 체계적 변화를 위한 솔루션 승수효과

아냐 링백

(Anja Lyngbaek)

우리가 오늘날 전세계의 식품과 농업 시스템을 처음 접했다면 그 불합리성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스코틀랜드 연안에서 50km 떨어진 바다에서 잡힌 생선이 약 10,000km를 돌아 스코틀랜드 가정의 식탁에 오르고, 국가 간에 동일한 식품을 수출하고 수입한다. 같은 식품인데도 바로 이웃 농장에서 가져온 것보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온 것이 더 저렴하다. 지역 수요를 충족하기 전에 지역 전체가 최고의 농지에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고 농부들이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에 농작물을 판매한다.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오늘날 식품은 영양 공급이라는 기본 기능이 쇠퇴하고 단순 상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투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이러한 투기는 가격 붕괴로 농민들을 파산으로 이끌거나 가격 폭등으로 수백만 명을 굶주림에 몰아넣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2008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식량폭동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경험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식품과 농업은 산업화, 중앙화, 기업화 및 화석연료 의존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소규모 가족농은 전례 없이 거대한 규모로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하는 대형 농장에 의해 설 곳을 잃고 있다. 이들 대규모 단종재배 농장은 기계와 농약, 유전자조작 농작물로 노동력을 대체하고 최소화한다.

농업이 산업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유통과 운송 시스템 또한 중앙화되고 기업화되었다. 몇 차례에 걸친 합병으로 소수의 대기업이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농업 투입물, 즉 씨앗, 비료 및 살충제를 통제하게 되었다. 가공식품 역시 마찬가지다. 슈퍼마켓에는 다양한 종류의 식료품이 즐비하지만 실제로 전세계에 판매되는 가공식품 대부분은 약 10개 정도의 대기업에서 생산된다. 소매 분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월마트와 같은 다국적 유통 체인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식품체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대형화, 소수화 현상은 저렴한 수입산 식품과 더불어 대규모 농공 생산과 대형 유통체인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효율성보다는 "기업 복지 프로그램"에 가깝다.

기업식 농업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기업식 농업의 선봉에 서 있는 미국을 예로 들면 1995-2012년 미국 정부는 대규모 기업형 농장의 옥수수, 면화, 밀 및 콩 재배에 2,560억 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상위 10%의 대형 농기업이 미국 농업보조금의 75%를 가져가고 있다. EU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농업보조금의 90%가 대규모 기업식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 비단 농업보조금뿐이 아니다. 산업화되고 세계화된 식품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화석연료 또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지난 한 해 화석연료산업은 5조 3천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오염, 건강문제와 같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외적 영향을 고려하면 보조금 규모는 약 10조에 달한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대기업에 무역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도 미국은 좋은 예가 된다. 미국은 미국산 식료품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 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을 통해 매년 기업과 무역협회에 2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 최대 유통체인점인 월마트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여 세계 최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대기업은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다국적 유통체인점과 같은 모바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면세 및 면세지 형태의 간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초기에는 고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기업이 경쟁에서 밀려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1990년대 영국에서는 슈퍼마켓이 하나 신설될 때마다 276개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손실 승수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넓은 고속도로와 거대한 컨테이너선 항만과 같이 정부가 국민 세금을 건설하는 장거리 무역용 운송 인프라 또한 모바일 기업과 글로벌 상품의 간접 보조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모두 고려하면 대기업이 성장을 거듭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된 수입산 식품이 지역 식품보다 저렴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직접 및 간접 보조금과 왜곡된 조세 제도는 대부분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소위 "자유무역" 조약을 통해 무역과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규제 완화는 산업체, 유통업체, 은행 및 금융 기관과 같은 기업이 이윤이 높은 곳을 찾아 전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 결과 국가는 세계 유동 자본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동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은 물론 저임금 및 노동과 환경 기준 완화와 같은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개발하고 이는 사회, 경제 및 환경적으로 하향 경쟁을 이끈다.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이러한 모델 하에서는 결국 모든 국가가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중심형 글로벌 경제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불리는 "자유무역" 조약은 글로벌 무역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인류와 지구의 웰빙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무역이 증가하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천연자원 고갈, 환경 파괴, 극심한 빈부격차, 부와 권력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다.

식품과 농업의 관점에서 농민들은 한편으로는 전세계 다른 농민들과, 다른 한편으로 기업식 농업과 경쟁해야 한다. 농기자재 비용은 상승했지만 농산물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 1910년 미국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 가격은 소매가의 40% 수준이었지만 (즉, 소매 가격이 1달러인 경우 농민이 40센트를 가

저갔다) 2014년에는 10%로 감소했다. 또한 무역 규제 완화는 직접 및 간접 보조금과 더불어 동일한 식품을 불필요하게 수입 및 수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매년 우유, 빵, 돼지고기를 각각 10만톤 이상 수출하고 거의 동일한 양을 수입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무역과 금융 규제 완화는 기업의 토지 약탈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식민주의를 낳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8-2010년에만 6천만 헥타르 이상의 비옥한 토지가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를 빌미로 해외 투자자에게 임대 또는 판매되었다. GRAIN의 최근 보고서는 "식품과 에너지 산업에서 농지와 수자원이 직접적인 로컬푸드 생산에서 생산가공용 상품 생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50년간 4개 농작물(콩, 기름야자, 유채씨 및 사탕수수)이 점유한 토지 면적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생산성이 낮고 기본 식량보다 공예작물 생산에 집중하는 거대 농장에 의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장이 밀려나면서 결과적으로 식량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지역 식품체계를 강화하고 기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지역식품체계 재건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이동 거리를 단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모든 식품 무역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은 아니고 수출용 식품보다 지역에 필요한 식품 생산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과 농업 지역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소비자, 농부, 환경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화석 연료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 거리를 단축하면 원거리 판매용 생산과 비교해 장거리 운송, 가공, 냉장 및 포장의 필요성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화석 연료 의존도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 폐기물 저감 전세계적으로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약 3분의 2가 포장 용지로 사용된다. 지역 수요를 우선 고려한다면 포장지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세계 식품체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최고 40%)도 크게 줄일 수 있다.
- 건강식품 및 농업 지역시장을 위한 생산은 화학약품에 기반한 단종재배에서 다양한 유기농 생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농경지를 재건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유기농업은 산업형농업과 비교해 화석연료 사용량을 30-50%까지 줄일 수 있다).
- 다양성과 식량안보 강화 지역시장을 위한 생산은 또한 대형 단종재배 농장보다 단위 면적 당 생산성이 높은 소규모 다종재배 농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EU 20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소규모 농장의 생산성을 더욱 높다고 보고했다. 케냐가 현재 소규모 농장의 생산성을 유지한다면 농업 생산성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 중앙아메리카와 우크라이나는 거의 세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UN에 따르면 소규모 농장은 전세계 식량의 70%를 생산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농경지는 전세계 가용 농경지의 25%에 불과하다. 이들 농민들은 또한 전세계 식용작물 종자의 최대 75%를 보존한다.
- 지역사회 및 지역 경제 강화 로컬푸드 이니셔티브는 생산자와 소비자, 독립 소매업체가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재건하도록 돕는다. 이들은 농업과 소매업 모두에서 고용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도록 돕는다. 지역기업은 소득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직접 또는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로컬푸드를 구매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승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유통체인점과 비교해 농장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10배,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구매할 경우 3.5배의 경제 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식품과 농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여기서는 광범위한 지역화 운동을 선도하는 로컬푸드 이니셔티브를 몇 가지 소개한다.

페리아 베르데(Feria Verde) 4년 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주말 농산물 직판장 2개가 설립됐다. 직판장은 매주 3000명의 소비자에게 유기농 식품을 공급하고 500가구(지역 농부들과 식품가공업자)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산호세 주말에 활기를 주는 페리아 베르데의 성공에 힘입어 많은 농부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푸드 어셈블리(Food assemblies)는 온라인 선주문 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농산물 직판장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농민들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농산물을 납품한다. 그리고 농민들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푸드 코디네이터에게 판매액의 16%를 지불한다. 현재 푸드 어셈블리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450개가 운영 중이고 영국과 스페인에도 진출했다. 프랑스는 2,600여명의 생산자가 매월 약 5만개의 주문을 처리한다.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는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방식이다. CSA는 중간상인이 없고, 소비자가 확실한 시장을 보장하고, 농산품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위험과 이익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밴쿠버의 공동체지원어업 프로그램인 스킵퍼 오토(Skipper Otto)는 계절성 어장 일부를 구입해 스킵퍼 오토 회원이 되면 지역 해산물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어기(漁期)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낚시를 할 수 있다.

푸드 협동조합(Food Cooperatives) 코펜하겐 푸드 협동조합은 미국으로 건너간 일본 생활협동조합(Seikatsu club)의 영향을 받아 설립됐으며 지역 생산자로부터 유기농 제철 식품을 직구매하여 약 3천명의 회원에게 공급한다. 현재 덴마크에만 21개 푸드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다.

공동체 식료품점 리얼푸드스토어(Exeter, UK)는 300명의 회원/공동 소유자를 보유한 공동체공제조합이다. 스토어는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지역식품을 공급하고 지역농민을 지원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됐다.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70%는 로컬(local)에서, 거의 100%는 지역(region)에서 생산된다. 또한 스토어에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거나 단체 식사, 문화행사, 워크숍 등을 열

수 있는 빵집과 커피숍이 마련되어 있다.

헝가리 카고마니아(Cargomania) 자전거 생산 협동조합, 자전거 납품 회사, 유기농 채소 단지, 유기농 제과점 등이 신선한 로컬푸드를 부다페스트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 활동이다.

지역기업연합(Local business alliances) 미국의 지역 생활 경제를 위한 연합, 일명 발레(BALLE: Business Alliance for a Local Living Economies)가 특히 유명하다. 지역기업연합은 다국적 기업에 맞서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지역 상품 구매"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 정치인에게 지역 경제 강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영업자와 지역경제를 돕는다.

지역 투자 계획: 미국 슬로우 머니(Slow Money)는 지속가능한 지역식품체계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작된 운동이다. 미국에는 23개 슬로우 머니 네트워크와 투자자를 찾고 있는 지역 농민, 식품 가공업자, 소매상인을 투자자 및 지역 자선가와 연결해주는 8개 지역 투자 클럽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저금리 또는 무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준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의 권한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영세 농민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한다. 우리는 글로벌 중심에서 로컬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하지만 지역 수준의 활성화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저항과 재생, 즉 기업 중심의 글로벌 성장경제에 저항하는 동시에 지역을 되살리는 이중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연계하고 "나"라는 개념을 "우리"로 바꿔야 한다. 또한 형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크리티컬 매스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써 이들 쟁점에 대한 실천을 위한 교육(education-for-action)에 참여해야 한다.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오늘날 위기가 소비 지상주의, '자유 무역', 및 기업 지배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이 늘고 있어 희망이 보인다. 국제생태문화협회(Local Futures)는 다양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이 지역화를 통해 거대기업의 막강한 힘에 저항하고 보다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역 경제를 위한 지역 화폐와 투자

그웬돌린 홀스미스
(Gwendolyn Hallsmith)

지역 경제란?

경제를 "지역 경제"와 "비지역 경제"로 나누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지역 상점에서 수입 전자제품을 구입한다면 지역 경제와 글로벌 경제 중 어디에 더 큰 도움이 될까? 물론 상점 주인도 비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 약간의 수익을 올리지만, 대부분은 마을을 떠나 실제 제품을 제조한 외국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우리가 지역 경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모두 지역에 소속되어 일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기나긴 인류 역사에서 수 만리 떨어진 외국산 제품을 지역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1600-1700년대에도 상선이 커피, 차, 파스타, 담배와 같은 이국의 상품을 가져와 귀족 사회에 소개했지만 우리가 매일 먹고 입는 먹거리와 의복까지 멀리 있는 농장과 공장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은 불과 50-75년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 할아버지할머니 시대만해도 모든 경제가 지역 경제였다.

내가 어렸을 때만해도 가족이 입는 옷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직접 지었다. 당시 기성복은 오늘날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마을 상점 주인들이 인근 직물공장에서 옷감을 떼어와서 필요한 만큼 주민들에게 판매했다. 우리 가족 먹거리는 모두 인근 농장에서 키우고 재배한 것들이었다. 특히 매일 아침 문 밖에 놔둔 우유상자에 우유를 놓고 가시던 목장 아저씨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큰 텃밭을 가지고 있었고 겨울에 대비해 농작물을 저장했다. 지금처럼 가공식품이 즐비한 대형 식료품점이 등장한 것도 비교적 최근이다. 우리 할머니는 한번도 상점에서 파는 믹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케이크를 만든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계셨다. 어머니가 지역 농장에서 우유를 사고 할머니가 지역에서 생산된 직물로 옷을 만들었을 때는 농부와 포목상인이 번 돈이 마을을 벗어나지 않았다. 농부는 마을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포목상인은 마을 주민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생산과 소비 인력이 훨씬 많은 도시만큼은 아니었지만 시골 마을 농부와 주민들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남부럽지 않는 생활이란 집, 건강한 먹거리, 옷, 교육, 건강 관리, 교통, 여가, 아동과 노인 돌봄 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농부는 토지와 농기계에 투자했고 자신이 직접 책정한 우유 가격으로 농작물 재배에 투입한 노동력을 보상 받았다. 포목상인은 포목상점에 투자했고 인근 직물공장에서 떼온 옷감을 판매한 가격으로 노동력을 보상 받았다. 식품과 직물 가격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국산품보다 수입품 가격

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추가 세금 또는 관세를 부과했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농작물 생산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한 우유, 치즈, 빵, 쌀과 같은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최저소득층에 배포함으로써 가격을 지원했다.

글로벌 경제란?

나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다. 지금 이 글도 컴퓨터로 작성 중이다.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마이크로 칩 프로세서는 아시아산, 케이스는 미국산, 키보드는 일본산이다. 나머지 부품들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었다. 나는 일본산 자동차를 타고 버몬트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컴퓨터 매장에서 이 컴퓨터를 구입했다. 자동차 휘발유는 루마니아에서 채취되어 루이지애나에서 정제된 것이다. 작가로서 컴퓨터나 자동차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또한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회의 주최자에게 글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도 중요하다.

나는 헝가리 바라톤 호수 마을과 핀란드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헝가리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전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핀란드는 한번도 못 가봐서 좀더 오래 머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4시간 밖에 머물지 못한다. 집에 돌아갈 때는 도쿄를 경유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글이 전달되었을 때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왔을 것이다. 내가 탑승할 항공기는 유럽과 미국에서 제작되고 연료는 사우디아라비아 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핀란드나 한국에서 국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만든 기념품을 살지도 모른다.

오늘날 전 세계는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은 세계평화를 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를 통제하는 힘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이는 반드시 개별 국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 지역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지도부, 즉 부유층(plutocrats)의 책임이 크다. 부유층은 우리가 아닌 자신을 위해 막강한 경제력을 사용한다. 이들은 글로벌 수준에서 은행과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여 민주주의 정부가 제정한 환경/사회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고 또 많은 경우 없애왔다. 그러나 하나의 핵심 시스템 내에 이러한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떨까? 완전히 보이지는 않는 시스템으로 인해 상당 부분 통합되어 있는 세계 권력과 부를 되돌릴 수 있을까?

돈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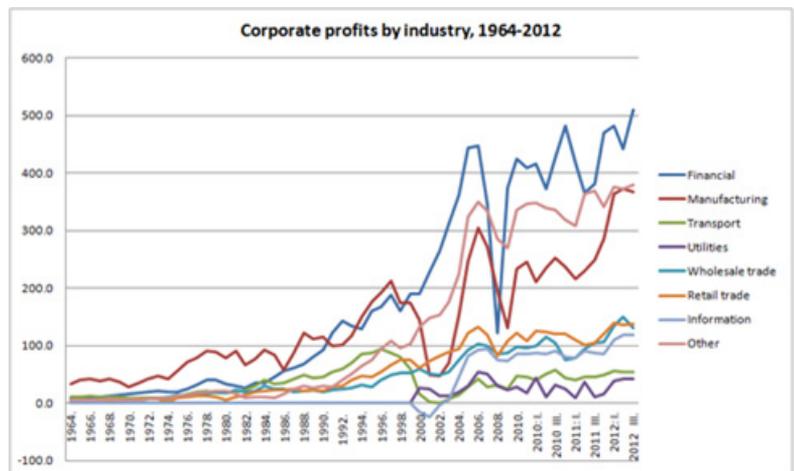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에 대해 나는 "그 말이 진실이 되려면 돈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랑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아마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반감을 가졌던 것 같다. 하지만 자동차에 비유하지만 돈은 경제를 움직이는 운송 수단이자, 유희유이자, 가속장치이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려면

돈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가 세계화될수록 더욱 쉽고 간단하게 교역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수입 관세와 같은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규범이 제정되고 중앙 정부의 금융 규칙과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외국 은행이 무역 자본의 중심지인 런던에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제 전세계 어디서나 역외 은행을 쉽게 볼 수 있고, 대규모 자금 흐름을 늦추는 규제가 철폐되거나 무용지물이 되었고, 진정한 글로벌 통화 제도에 의해 글로벌 경제가 움직이고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통화 제도와 달리 이 글로벌 통화 제도는 특정 정부가 이를 규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스위스 바젤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규칙을 수립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통제력을 갖지 않는다. 캐나다 은행처럼 공공소유든 미국 연방준비은행처럼 민간소유든 모든 중앙은행은 이 제도를 적용 받는다.

모든 중앙은행은 달러, 원화, 유로, 엔, 페소 등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화폐를 발행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부채로 발행된다. 부채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 통화이고 합법적인 국제 카지노로 알려진 파생시장 수익과 더불어 부채에 대한 복리이자는 옷이나 음식처럼 실제 상품은 아니지만 글로벌 부호들의 거대한 재원이 되고 있다. 유통되는 모든 화폐가 부채로 존재하면 제도와 지역 수준 모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부터 자동차까지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재화의 비용 상승도 이러한 영향에 해당한다. 독일 경제에 대한 마르기트 케네디(Margit Kennedy)의 연구에 따르면 부채에 대한 이자는 쓰레기 수거와 같은 단순 서비스(12%)와 공공 주택(77%)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에 상당하는 역할을 한다.¹⁾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우선은 기업이 대출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기업은 신용 한도, 대출금, 채권,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 필요한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모든 제품의 일부로 금융부문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높아진다. 최근 미국 데이터에 따르면 산업계 중 금융업계 수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그래픽 참조)²⁾



산업별 기업 수익, 1964-2012

금융, 제조, 운송, 공익사업, 도매, 소매, 정보, 기타

제도적 차원에서 부채에 기반한 이러한 통화는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무일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어 기본 생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지고 경쟁이 극심해 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대출 금리는 돈을 대출해준 금융회사에 지불되므로 돈이 없는 사람들, 정부, 기업으로부터 돈이 많은 이들에게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를 위한 지역 화폐

지역 경제로부터 소수에게로 자금이 이동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쟁이 심화되고 재화와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간단하고 지역적인 활동부터 전국 규모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까지 다양한 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간단한 지역 전략에 집중하고 규모가 큰 정치적 활동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자.

오늘날처럼 금융제도가 복잡해지기 전까지 대부분 경제는 상호신용(mutual credit)에 기반했다. 이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물물교환보다는 믿을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 네트워크에 기반한 교환제도에 가깝다. 오늘날에도 시간 교환, 상업적 물물교환 제도, 주택 교환 제도 등 고대 교환 제도를 모방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시간 교환은 학교, 양로원, 기업부터 마을, 도시, 지역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시간 교환의 기본 원칙은 매우 간단하다. 즉 나의 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한 시간과 교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기량에 관계 없이 모든 시간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교육 수준이 높고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시간의 가치가 커지지 않는다. 의사와 변호사도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다. 저녁에 외식을 나가기 위해 아이를 돌봐줄 보모를 구한다면, 의사나 변호사의 기량처럼 보모의 기량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미국의 경우 시간 교환을 통해 교환된 재화와 용역은 자발적 시간으로 면세 대상이다. 즉, 교환된 가치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노인 돌봄에 후레이 카푸(Fureai-Kippu, 돌봄 티켓)라는 유사 제도를 사용해왔다. 후레이 카푸는 자원봉사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을 정기적으로 돌본 시간이 이들의 "시간 계정"에 입금되고 사와야카 재단(Sawayaka Foundation)이 전국 단위로 이를 관리한다. 시간 계정은 계정 단위가 엔화가 아니라 서비스 시간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일반 예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시간 계정에 적립된 시간을 사용해 일반 건강 보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발리는 천 년 동안 공동체 시간(community time)의 가치를 인정하고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한 이중 화폐 제도를 운영해왔다. 모든 발리 주민은 춤, 미술, 의식, 특히 사원에서 치러지는 의식과 같은 공동체 활동에 자기 시간의 30%를 할애해야 한다. 주민들은 또한 쌀 재배를 위해 관개시설을 관리하는 수박(subak)과 지방 정부처럼 시민들의 공동체 생활을 조정하는 반자

르(Banjar)라는 공동체 집단에 속해 있다. 모든 발리 주민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간을 소비한다. 하나는 섬에 있는 영리회사에서 전통적 의미의 직장을 갖는 것이고(국가 화폐인 루피아로 지불 받음) 다른 하나는 "반자르의 공동 이익을 위한 노동"을 뜻하는 나아한 반자르(Nayahan Banjar)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아한 반자르는 일정 시간, 일반적으로 약 3시간을 계정 단위로 사용한다. 각 반자르는 한 달에 7-1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각 가정은 화폐(루피아)와 시간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중 화폐 제도는 공동체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은 많고 시간이 부족한 공동체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더욱 쉽게 승인 받을 수 있다. 반면 시간은 많고 돈이 부족한 마을은 시간을 더욱 많이 지원해 화려한 축제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전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더라도 큰 빈부 차이 없이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은 대소사를 치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작업은 다른 지역 활동은 물론 학교 또는 도로 개수 등 중앙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상업적 물물교환(Commercial Barter) 제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다양한 조세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복잡한 편이다. 현대적 의미의 상업적 물물교환 제도는 은행이 기업의 신용한도를 취소하자 도시 기업주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20세기 대공황에 스위스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들은 한 기업에서 자재를 구매한 시점과 고객이 이를 지불한 시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신용이 필요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계", 즉 비르츠하프츠링(Wirtschaftsring)에서 기업 간 부채와 신용에 대한 상호 신용 제도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실제 소유주는 바뀌지 않지만 스위스 프랑으로 이들 새로운 단위(일명 "Wir")의 변화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백 년간 이 제도는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스위스 중소기업의 75%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계량경제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 경제에 경기역행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스위스 경제가 침체하면 Wir 사용이 증가했다. 이는 경기 침체에 소중한 스위스 프랑을 사용해 기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덕분에 사람들은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었고 이는 스위스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었다. 즉, 초콜릿이나 시계가 아닌 이중 통화 제도가 스위스 경제를 되살린 것이다.

기업과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 투자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 차원의 통화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국립은행 - 부채를 사용해 지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스파르카세(Sparkasse) 시스템과 같은 지역 공공 은행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다. 금융 서비스 및 자본 시장 개정법(2015) 하에서 클라우드 소싱 투자와 같은 새로운 투자 제도를 사용해 지역 기업에 예금을 투자할 수도 있다.³⁾ 한국은 합작은행과 신용조합부터 우체국까지 다양한 종류의 준공공적 은행을 기점으로 지역 경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공공은행은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일반 은행을 가리킨다. 시민들은 민간 은행처럼 이들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대출하고 계좌를 개설한다. 그러나 민간 은행과 달리 공공은행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전세계에는 다양한 공공은행이 존재한다. 독일의 스파르카세 모델은 지난 200년간 경기역행적 대출과 수익의 공공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 독립적인 지역 은행 제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경기역행적 대출 사례는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주로 생산하는 독일 공장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작은 마을에 위치한 이 작은 공장은 경기 변화에 특히 민감해 금융 위기가 심각했던 2008년 주문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공장은 나중에 경기가 회복했을 때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려면 지금 공장 설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산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역 저축은행을 찾았다. 저축은행은 오랫동안 지역과 함께해온 덕분에 이 작은 공장의 특징과 오랜 성공과 수익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 공장에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공장은 생산 시설을 재정비했고 다행히 재정비가 완료된 즈음에 다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장 노동자들은 일이 없던 시기에 공장 재정비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위기에도 지역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지역사회와 접촉이 없는 거대 민간은행이 금융시장을 점령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는 기대하기 힘들다.

시민, 기업, 사회의 저축을 민간 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지역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신용은행, 합작은행, 클라우드소싱 기부와 투자, 지역 투자 클럽, 맞춤형 예금, 지역 공모는 모두 지역 주민들이 은행에 저축해놓은 자금을 지역 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주 또는 국가마다 이에 필요한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 실천 방안을 수립하기 전에 한국 투자 환경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투자는 일반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고 지역 기업, 프로젝트 또는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투자는 법적으로 유가증권으로 불린다. 유가 증권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부 채 : 대출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보통주 : 주주는 투자 가치 상승과 배당금을 기대한다.

로열티 : 참가자에게 일정 비율의 기업 매출 또는 수익을 배당한다.

투자의 기본 이론은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보장하는 은행 계좌는 일명 "정크 본드"보다 이자가 낮다. 또한 대출자 재산으로 보증된 대출은 보증이 없는 대출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러나 누구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가 파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국내 또는 글로벌 기업은 물론 지역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역 기업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특정 비즈니스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결론

경제는 일자리, 소득, 사업 계획 또는 시장 이상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경제는 인간이 식량, 물, 의복, 쉼터, 교육, 보건, 건강, 안전한 환경과 같은 가장 중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중재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과 투자는 인간의 욕구 충족에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바뀌어나가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http://www.margritkennedy.com/prof_dr_margrit_kennedy.html

2) <http://im-an-economist.blogspot.com/2014/01/corporate-profits-in-us-finance-vs-non.html>

3) <https://www.crowdfundinsider.com/2016/11/92772-development-investment-crowdfunding-south-korea/>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7, Jeonju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for Localization

CHAPTER 05

워크숍 1세션 '지역의 미래'

-
-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사이먼 리차드슨 (Simon Richardson)
 - 일본 슬로우 운동 사카타 유스케 (Yusuke Sakata)
 - 지역의 미래 이유진

워크숍 1세션 '지역의 미래'

- 민선6기 우리 시의 중요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場(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함.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10	10'	개회	개회인사, 발제 · 토론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안내
14:10 ~ 14:40	30'	발제 1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사이먼 리차드슨 호주 바이런 샤이어 시장
14:40 ~ 15:10	30'	발제 2	일본 슬로우 운동 사카나 유스케 긴키대학 산업이공학부교수
15:10 ~ 15:40	30'	발제 3	지역의 미래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15:40 ~ 15:50	10'	휴식	
15:50 ~ 16:50	60'	종합토론	김재병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위원장 양준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처장
16:50 ~ 17:40	5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발제 · 토론자와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좌장 임경수(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 성공의 전제조건

사이먼 리차드슨
(Simon Richardson)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할 때 누구,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로 행동 메커니즘을 분해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긍정적인 변화 또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말을 공동체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선 방법을 찾을 때도 효과적이다. 여기서는 특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바이런 샤이어의 사례를 통해 누가, 어떻게, 왜, 언제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어떠한 행동이 도출되는지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누가

시장으로서 나는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 솔루션을 검토한다. 이들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해본다.

1. 합리적이고, 유익하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2. 시기 적절한 아이디어인가? 현재 상황이 도움이 되는가?
3.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가?

사이먼 시넥(Simon Sinek)은 타인의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왜로 시작하라(Start With WHY)'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이미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WHO)로 가장 먼저 시작한다.¹⁾ 본 회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소개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바이런 샤이어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전문성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 공유 및 소유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은 전문성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에너지 분야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과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없이 지역에서 에너지를 관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무공해 바이런(ZEB: Zero Emission Byron)은 우산조직으로서 주요 국제 에너지 컨설팅의 대표,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광전지 및 재생 에너지 공학부 조교수, 호주 청정기술 및 기후 관련 웹사이트인 Reneweconomy.com.au의 창립자 및 편집자,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는 주요 투자자 등이 이사회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1) www.startwithwhy.com

호주 최초의 공동체 소유 에너지 소매업체인 에노바의 이사회 의장은 공익사업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하고 호주 주요 은행 재무이사로 근무했으며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공동체 소유 재생 에너지 멀럼빔비(COREM: Community-Owned Renewable Energy Mullumbimby) 역시 재생 에너지 및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3개 공동체 토지 신탁 프로젝트는 전문성 수준에 따라 아이디어와 행동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바이런 공동체 토지 신탁(CLT: Community Land Trust)에서는 의회, 지역주택 공급업체, 영향력 있는 투자자, 사회 서비스 제공업체 및 바이런 커뮤니티 센터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공동체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는 바로 이 광범위한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브룬즈윅 에코마을(BEV: Bruns Eco Village) 제안서는 그룹이 공식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참가자의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²⁾ 마을에 입주할 예비 주민들은 주택 마련 과정의 일환으로 환경 마을 조성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4개월 과정의 마을 개발 프로그램(VDP: Village Development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에코 마을 및 공동체 생활, 사회 설계 및 보이지 않는 구조, 생태적 설계 및 가치 및 윤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워크숍과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성은 고등 교육뿐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하게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

어떻게

지역 의회와 다른 주 및 연방 부처, 민간 투자자, 공동체의 전문성을 조정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방식의 민관 파트너십, 다자간 파트너십, 협력적인 거버넌스 모델은 말과 비전을 실제 행동과 결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통적으로 지방 정부의 민간 파트너십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거나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의회가 일반적으로 관련 없거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분야의 상업 거래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영향력 있는 투자자 그룹이 재생 에너지 생산과 소유권을 증대하고 기타 공동체 주택, 경제 개발 및 건강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를 확대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호주의 변화하는 나눔 문화는 훌륭한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

2) <http://brunsecovillage.com.au>

호주는 원래 주 정부가 강력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주의 원칙에 기반했기 때문에 나눔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기초가 많이 약해졌고 이제 막 재산을 형성하거나 가족 재산을 물려받기 시작한 X 세대가 정부가 빠져나간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동시에 민관협력관계를 새롭게 재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단, 이번에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바이런 의회는 지속 가능한 성과와 행동을 위한 이 새로운 형태의 민간 투자를 통해 산업계와 투자자의 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에 대한 개념을 전환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체 성과를 실현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의회는 얼마 전 공공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기회 보호 정책을 공개했고 곧 의회 공식 정책으로 승인 받을 계획이다. '파트너십 지원(Supporting Partnerships)' 정책의 목적은 투자 제안을 처리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평한 과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자원 조달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 에너지 분야의 거버넌스는 전적으로 파트너십에 의존한다. 의회는 두 개 MOU 즉, ZEB와 1개, ENOVA 및 COREM와 1개 MOU를 각각 체결하여 각 단체의 주요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과정을 공식화했다. 또한 모든 단체가 공동체 프로젝트에 더욱 넓게 참여하고 연계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개인과 의회 공동체 그룹, 공동체를 연결하려면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 재정적으로든 현물 지원을 통해서든 각 관계자는 '승부의 책임(skin in the game)'을 제공해야 한다. 전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언제

나는 최근 만평 하나를 보았다. 만평은 두 개 컷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컷에서는 정치인이 많은 관중을 앞에 두고 연단에 서 있었다. 그리고 "누가 변화를 원합니까?"라고 물었다. 모두가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다음 컷에서도 역시 많은 관중 앞에 정치인이 서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가 변화하기를 원합니까?"라고 물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이 만평은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 생활 방식으로 변화를 꾀할 때 부딪치는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쉬워 보일 수 있다. 에너지를 직접 통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는 사이먼 시넥이 말한 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공동체는 에너지 수요를 통제하여 경제적,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에노바 이사회의 앨리슨 크룩 의장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관심이다. 공동체 소유라는 개념은 환영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변화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호주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에서조차도 무관심이 공동체 변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무엇인가를 바꾸려면 누군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는 이성과 감성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칩과 댄 히스(Dan and Heath)는 이러한 행동 변화 과정을 코끼리 타기에 비교했다. 즉, 라이더(이성)는 방향을 지시해야 하고 코끼리(감정)는 동기와 경로가 필요하다.³⁾ 전문성은 행동 요건을 제시하고 우려를 경감시키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라이더(이성)에게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

둘째, 결과와 행동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에 따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한다. 주민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변화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이더의 머리와 코끼리의 마음이 함께 전진하려면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명확한 과정을 모두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 형성 사례는 바이런 공동체 토지 신탁 실무그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그룹은 초기부터 진행 경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보고서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결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규모 회의를 가질 때부터 이미 경로를 확인했다. 보고서는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델 추천, 법적 구조(유한회사) 및 세금 공제 자격 설정, 소셜 벤처 호주와 같은 영향력 있는 투자자 그룹, 민간 개발자로부터 투자 유치, 공식 파트너십에 대한 의회 보고, 광범위한 지원을 위한 마케팅/공동체 참여 전략 개발, CLT 수립, 개발에 사용할 의회 소유 토지 확인 및 확보 등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따라서 이미 상당 작업을 완료할 상태에서 공동체 지원을 요청했다. 라이더는 만족하고 감정적으로 더욱 쉽게 동조하고 코끼리가 프로젝트 성공 경로를 따라갈 수 보장할 수 있다.

말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즉, 이성적 마음이 감정적 마음을 조종하려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그룹을 하나로 묶는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체에 여행에 대한 정서적 동기를 부여하고, 경로를 명확히 정의하고,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갖춰야만 무관심을 행동으로, 저항을 해결책으로, 말을 실제 결과로 전환할 수 있다.

3) C and D Heath, Switch, Random, New York, USA, 2011

일본 슬로우 운동

사카타 유스케
(Yusuke Sakata)

지역발전 및 전환마을

일본에서는 다양한 슬로우 라이프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중 지역활성화 협력단원과 전환마을 활동을 소개한다.

지역활성화 협력단원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고용한 인력을 가리킨다. 이들은 지역 인구 유입 또는 온라인 쇼핑을 사용한 지역 상품 판매 증대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협력단원은 일반적으로 2-3년 단위로 고용된다. 하지만 고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경우도 있다.

2008년 설립된 일본전환(Transition Japan)은 일본 전환마을 활동의 대표 단체이다. 본사는 도쿄나 기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야마나시(Yamanashi)에 위치한다. 각 마을의 전환마을 활동을 위해 개별 그룹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핵심멤버 세미나 후 전환마을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구마모토의 남아소(South Aso) 그룹은 폐교 건물을 사용해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회원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살다가 귀촌하여 농사를 짓고 살며 지역주민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바이오매스 에너지

최근 일본에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전력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FIT 법은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대체에너지 도입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오카야마 현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립 후 2년 반 만에 건설비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2017년 일본 발전소 발전량은 1백만 kW이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목재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들 발전소에는 연간 2천만 입방미터 규모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가 필요하다. 이는 간벌 후 산림에 남아 있는 목재량에 상당하는 양이다. 이들 목재를 발전소로 운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매년 공급하는 지속가능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 산림에는 매년 약 1억 입방미터의 임산물이 축적된다. 현재 일본의 연간 목재 사용량은 거의 1800만 입방미터이고 일본 정부가 목재 사용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산림은 목재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산림산업은 근로자 노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다른 대체 에너지 부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슈 전력망은 증가하는 태양열 발전량을 감당하지 못했고 태양열 발전소 자체도 풍경 파괴 및 산사태 위험 증가 등 지역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도시 지역의 대체 에너지 사용

도시 지역에는 하수구 폐수, 하수구와 강물 간 온도차, 건물 사이로 부는 바람 등 작지만 미사용 에너지원이 많다. 이들 미사용 에너지 중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는 소각로 폐에너지이다. 일본은 1958년부터 소각로의 폐열을 재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온수를 공급하는 등 오래전부터 폐에너지를 사용해왔다. 일본 정부는 현재 발전 설비를 갖춘 소각로 설치를 장려하고 2030년까지 이들 소각로 비율을 69%로 증대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발전시설을 갖춘 소각로 비율은 11%가 넘고 총 발전량은 약 1억kW, 평균 발전효율은 약 13%다. 열을 사용해 온수를 생산하면 소각로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일본은 온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 슬로우 라이프 운동의 미래

일본 지역 경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도시,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같은 대도시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성향으로 인해 소도읍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어 농촌 지역의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일본 슬로우 운동의 세 가지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정부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고 FIT를 통해 대체 에너지 지원함에 따라 슬로우 활동의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미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연구원

■ 한국의 탈핵 · 에너지전환과 전환도시 전주

-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기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2011년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핵에너지에 대한 우려 급증 등으로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100%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BMW, 구글, 애플 등 80여개의 기업들도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조달할 것을 선언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담대한 비전 제시. 신규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20%와 탈원전 로드맵 수립 발표. 국정 5개년 100대 과제에 탈원전 에너지전환이 포함되었으며, 에너지세계개편, 전기요금요금체계개편 로드맵과 같은 핵심정책이 년도를 명시해 제시되었음.
- 지자체차원의 에너지전환은 2012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충청남도 2050년을 목표로 한 탈석탄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중. 부산시 클린에너지시티정책 등을 펼치고 있음. 제2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분권 부각 가능성. 지자체로서는 분산형전원과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신산업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음.
- 영국 토트네스에서 시작된 '전환마을' 운동은 "기후변화와 피크오일에 대한 공동체의 대안"을 표방하며, 공동체의 참여 속에서 "에너지하강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먹을거리, 교통, 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음. 산업화 이후 지역발전 방식이 세계화, 전문화, 특성화의 영향으로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면, 피크오일 시대에는 다시금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먹을거리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재지역화가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 '아주 멋진', '기막히게 좋은' 이란 뜻을 가진 FAB에 도시를 붙인 팹시티(FAB City) 운동이 확대되고 있음. 팹시티는 자급자족의 기술과 정보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세계도시들의 네트워크. 자급자족의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유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체 생산하여, 도시 · 국가 간 물류 운송에 따른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활동.

- 전주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표방하며, 2015년 먹을거리 자급, 에너지 자립, 생태환경 보호라는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같은 해 전주시 에너지안전(자립)도시 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 주목할 점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전주시의 에너지계획을 수립함. 바람직한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구상하는 데 적합한 에너지 백캐스팅(energy backcasting) 방법론에 에너지 시나리오 워크숍을 결합하고 시민합의제 정신 구현, 지역시민단체와 행정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이 에너지계획을 디자인한 첫 사례로 기록
- 시민들은 제시된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야심차고 담대한 시나리오를 선택해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 에너지디자인 3040> 비전과 목표 설정 합의하였음.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 에너지디자인 3040>는 ①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 실현, ②2050년 에너지 자립 지향, ③이클레이 '에너지안전도시' 동참, ④시민참여 '에너지디자인' 원칙 구현, ⑤'에너지 문화도시' 모델 창출을 전주의 미래비전으로 설정
- <에너지디자인 3040>은 전주 시민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2025년에 에너지자립 30%, 전력자립 40%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지표로 결정. 이를 실행하기 위해 5대 전략, 10대 방향, 30대 사업을 설계, 1단계(2016~2017년), 2단계(2018~2020년), 3단계(2021~2025년)로 우선사업(9개), 중점사업(6개), 선도사업(5개), 기반사업(10개)을 추진할 예정.
- 전주시는 2016년부터 에너지자립으로의 전환관리 시스템 마련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는 중요한 과제임. 광역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전주 협력체계 마련, 전주시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른 절차 검토와 같은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더불어 생태도시 거버넌스에서의 에너지 전환관리 거버넌스 모색,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역에너지계획 실현 위한 거버넌스로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에너지전환과 신설, 전주에너지전환기금 조성(소각장 폐열 판매수입 100억 목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기초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의무가 없으나 전주시는 자발적으로 <에너지디자인 3040>계획을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하였으며, 무엇보다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시민참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 만큼 에너지전환이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삶의 전환, 일자리의 전환, 지역경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 전주시의 경험이 타지자체, 나아가 전환마을, FAB시티운동과 연계된다면 더욱 확장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7, Jeonju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for Localization

CHAPTER 06

워크숍 2세션 '로컬푸드'

-
- 로컬푸드 | 저항, 재생 및 실천을 위한 교육 아나 링백 (Anja Lyngbaek)
 - 통합적 지역 먹거리 정책 강성욱

워크숍 2세션 '로컬푸드'

- 민선6기 우리 시의 중요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場(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함.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10	10'	개회	개회인사, 발제 · 토론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안내
14:10 ~ 14:40	30'	발제 1	로컬푸드 저항, 재생 및 실천을 위한 교육 아냐 링백 Local Futures 프로그램 디렉터
14:40 ~ 15:10	30'	발제 2	통합적 지역 먹거리 정책 강성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실장
15:10 ~ 15:20	10'	휴식	
15:20 ~ 16:30	70'	종합토론	김현곤 국회 김현권 의원 보좌관 조경호 지역농업연구원장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
16:30 ~ 17:40	7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김재병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위원장 양준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처장
17:40 ~ 17:5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로컬푸드

| 저항, 재생 및 실천을 위한 교육

아냐 링백

(Anja Lyngbaek)

나는 14살 때 작은 텃밭에서 가족들의 먹거리를 직접 재배해 먹는 집에 머문 적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식품과 농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대해 좀더 공부하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학생들과 더불어 농약에 의존하는 농업 시스템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가 1980년대였는데, 오염된 식품과 산업형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유기농 운동이 태동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10년 이후 식품 가공업체와 유통업체가 날로 대형화, 중앙화되고 지속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작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농장의 오염 완화만 우려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1천km 이상 이동하는 식품 이동 거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국

식품체계 지역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최초의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이니셔티브인 꾸러미사업(boxscheme)을 비교 연구했다. 노스우드 농장은 몇 년간 3.5 헥타르의 농지에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여 영국 유통체인점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판매가격이 너무 낮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농장은 독일 CSA 프로젝트를 본받아 중간 상인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직접 농작물을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지역 NGO에 도움을 요청했다. 직접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주 농장에서 신선한 농작물을 구매하겠다는 지역 소비자 30명을 확보하고 오래지 않아 농장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인 200명까지 회원이 증가했다.

다음은 직접 지역 마케팅의 이점이다.

운송 | 유통체인점에 판매할 때는 농장에서 포장회사로 야채를 운송해 포장을 마친 후 다른 지역에 있는 중앙 저장고로 옮겼다가 다시 개별 체인점으로 배달했다. 농장에서 판매점까지 연평균 이동 거리만도 43,200 ~ 54,000km에 달했다. 하지만 지역 소비자는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내에 거주하고 있다. 비닐을 사용해 일일이 개별 포장할 필요 없이 재활용 박스에 야채를 담아 마을 근처에 있는 드롭 장소에 가져가면 회원들이 알아서 가져간다. 연간 총 이동 거리는 1620km이다.

다양성 | 소비자가 모든 야채를 한 농장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가능한 다양한 야채를 재배하기를 바랐다. 노스우드 농장은 유통체인점에 판매할 때도 18가지 농작물을 재배했지만 지역 직접

판매로 전환할 후 재배 작물을 60종으로 확대했다.

소득 | 유통체인점에 유기농 야채를 판매할 때 노스우드 농장의 연간 순수입은 750-1000 파운드/헥타르였지만 직접 판매로 전환한 후 6,000-10,000파운드/헥타르로 증가했다. 농장은 지역 직접 판매로 소득이 6-10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꾸러미사업은 농번기에 회원들이 농장 일을 돕고, 매월 농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매주 픽업 장소에 야채를 배달하면서 회원들을 만나는 등의 다양한 공동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재건을 도왔다. 회원들은 유통체인점과 비슷한 가격에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구매함으로써 식단이 더욱 건강해지고 아이들의 야채 섭취량도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꾸러미사업 비교 연구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식품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유기농과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당시만해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로컬푸드는 새로운 개념이었고, 지역식품체계와 경제의 붕괴 신호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농업을 다시 지역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영세농장보다 거대농장에 유리한 규제, 세금 및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중소농장과 지역 상점은 급속도로 쇠퇴했다. 도축장과 같은 가공업체가 소수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농민들이 가축을 도살하려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이동해야 했고 이는 영세 농장주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마찬가지로 대형 유통체인망이 시장을 장악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강조함으로써 농부들은 심지어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다른 농민들과 서로 경쟁해야 했다. 이는 2000년대 초 영국의 영세 낙농가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WTO와 일련의 양자간 및 지역 자유무역 조약을 통해 처음에는 무역, 이후에는 금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업과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는 협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지금도 마찬가지) 이러한 문제를 거의 인지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이는 식품과 농업의 세계화와 기업화를 야기한 주요 원인임이 분명하다.

2000년 나는 영국 최초의 로컬푸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국제생태문화협회(Local Futures)에 가입했다. 프로그램은 수출용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농산물을 우선 생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식품 이동 거리뿐 아니라 기업의 중간 유통을 줄여 지역식품체계 재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활동을 집중했다. 우리는 로컬푸드 로드쇼를 개최하고 로컬푸드 툴킷과 같은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했다. 특히 툴킷은 여러 곳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전국의 공동체에서 이들 자료를 사용해 글로벌 식품 체계에 대해 토론하고 농민과 함께 로컬푸드 이니셔티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우리는 또한 식품과 농업 지역화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영국 영세가족농장협회(Small and Family Farm Association)와 협력하여 로컬푸드를 NGO의 주요 의제로 포함시키고 영국 남부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도왔다.

오늘날 로컬푸드는 영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농산물 직판장, CSA, 식품 협동조합, 공동체 텃밭, 로컬푸드 매장 등 다양한 로컬푸드 이니셔티브가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로컬푸드를 사용하려는 식당도 크게 늘었다. 일부는 진정으로 지역 농민을 지원하고 지역식품체계가 강화되기를 바라지만 고객 유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로컬푸드는 이제 대형 유통체인망에서 관심을 보일 정도로 성장했다. 로컬이 오늘날 새로운 유기농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체인망에서 취급하는 유기농 식품이 농약만 사용하지 않을 뿐 다른 모든 면에서 산업생산 방식을 그대로는 따르고 유기농업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대형 유통체인망에서 판매되는 로컬푸드도 지역식품체계의 이익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대형 유통체인망은 영세농장에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거나 농업 다각화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형 유통체인망이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은 대부분 지역을 빠져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해관계자의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다른 지역에 재투자된다.

라틴 아메리카

나는 지난 15년간 멕시코에서 지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아동, 청년, 성인들에게 로컬푸드와 농업의 필요성과 장점을 알리는데 활동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유기농 텃밭을 재배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유기농 생산을 중심으로 농촌 가정을 위한 식량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유기농작물 생산기술 교육, 지역식량안보 강화, 농민들의 지위 향상,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제고, 세계화되고 기업화된 식품체계의 문제 및 로컬푸드 경제의 장점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목표로 했다.

멕시코와 기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유기농산품에 대한 규정을 뛰어넘어 토지 및 토양 보호를 장려하는 농업생태학 운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로컬푸드 이니셔티브가 추진됐다. 수백만 명의 영세농민과 농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MST: Landless Workers Movements)은 생산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식량주권을 포함한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으로서 농업생태를 가르친다.

국제풀뿌리운동인 비아캄페시나 (La Via Campesina)가 처음 사용한 "식량주권"은 스스로의 식품과 농업 체계를 정의할 권리와 생태학적으로 올바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건강한 식품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비아캄페시나는 전세계 2억 명의 영세농민과 소작농을 대표하는 우산 조직으로서 원거리 시장이 아닌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생산에 집중하여 식품과 농업 체계를 장악한 기업에 저항하고 재생 농업 모델을 지원한다.

지난 수십 년간, 소작농과 영세농민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비아캄페시나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뛰어넘어 기업의 토지 수탈, 파괴적인 식품 및 농업 정책, "자유무역" 협정 및 유전자 변형식품 증가에 저항하는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조직적인 농민 운동으로 성장했다.

비아캄페시나 대변인은 식량주권에 대한 요구를 식품체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지역사회에 넘기고 식품, 인간과 식품의 관계,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식량안보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 관점에서 구조선을 구축하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저항과 재생이라는 비아캄페시나의 이중 접근법은 기업이 식품과 농업을 통제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인류와 지구를 위한 지역 경제로 전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통합적 지역먹거리 정책

강성욱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실장

시민 촛불혁명이 낳은 먹거리정책의 방향

-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친환경급식
- 학교 과일 간식제
- 우리농산물 군대급식
- 취약계층(어르신 등) 공공급식
- 저소득층 영유아 먹거리공급 프로그램 구축
- 원료기반 GMO표시제 강화
- 학교급식에서 GMO퇴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농업, 농촌분야의 개혁

-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 100대 국정과제(농업분야) |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 지역농업, 지속가능한 생태, 경제, 사회 구축을 위한 장기적 관점 결여
- ※ 농촌 공동체와 생태 환경의 회복, 인재양성, 철학 및 전략전술 수립내용의 결여

역시 '전주푸드 2025플랜'

-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전국 최초로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실현을 위한 전주푸드플랜 10년 계획(2015년 11월 17일 발표)을 세워 추진 중.

●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립순환경제 구축 등 세 가지 골자로 6대 전략과제와 15대 정책과제, 25개 과제의 실행

- 전주시민의 식량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기반인 전주농민의 소득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연간 500억 원 규모(전주시 식품구매비용의 5%)에 머물고 있는 전주산 농업 생산액을 향후 10년에 걸쳐 연간 2,000억 원 규모로 끌어 올려 밥상과 농업,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대도시 먹거리 전략

전주푸드가 가는 길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 2015년 12월 1개소, 2016년에는 2개소의 전주푸드 직매장을 먹거리 유통 및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시범개장 함. 또 월드컵경기장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선 먹거리 취약계층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공공급식을 공급하고 전주시 동물원내 슬로푸드 레스토랑 1호점을 개설. 또, GMO(유전자조작식품) 등을 쓰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시민의 밥상에 공급하고 인근지역 군과의 제휴푸드 연결망 구축.

농민에게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과 일자리 보장 : 전주푸드플랜의 최우선 과제는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를 확립하는 것. 농업의 생산구조를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 공급체제로 개편하고 다수의 가족소농, 중농, 겸업농의 생산물을 직매장, 공공급식 사업, 슬로푸드 레스토랑 순차 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와 판로를 연결. 생산은 전주시의 전체 7,000여 농가 중 1,000여 농가를 우선 참여시키고 향후 10년 내에 5,000여 농가로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화.

지역순환 전주경제 활성화 : 생산, 가공, 도농교류, 식문화 교육 등을 통해 창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생산-지역소비는 자본의 지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내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으로 전주시가 대한민국의 문화 수도의 저력 위에 세계적 건강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대도시 먹거리 전략의 필요성

시민 밥상이 위태롭다 :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4%(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6위이고, 주곡인 쌀을 빼면 자급률이 5%에 불과. 국내 농업기반은 취약하여 주요 수입품목인 옥수수, 밀, 대두의 약 60%를 미국 카길사 같은 세계적 곡물대기업을 통해 수입 콩, 카놀라유 등 우리가 섭취하는 가공품 원료 또한 수입곡물에 의존.

GMO 수입 규모로는 일본이 세계 최대 수입국이지만 거의 사료용으로 쓰는데 반해, 식용GMO 수입량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민 1인당 GMO소비량도 약 38kg을 소비하고 있어 68kg을 먹는 미국 다음으로 많이 먹는 'GMO천국' 인 나라. 우리나라 국민이 주식으로 애용하는 콩나물, 두부, 식용유 같은 식품이 대부분 GMO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음.

곡물자급률이 24%라고 하는 의미는 만일 현재의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이 정치, 경제, 환경 등 국제 조건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4명의 인구 중 3명은 굶게 된다는 뜻. 2008년 경제성과 효율성의 경제논리를 내세워 쌀과 밀의 자국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정책으로 전환하여 국가 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한 필리핀과 이집트의 사례는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농민이 사라진다 :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50여 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품목과 지역 구분 없는 무한경쟁에 들어간 상태이며, 특히 가까운 중국발 농산물 쓰나미 공략은 탄탄한 농업 생산기반이 준비되지 않은 우리나라 농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더구나 모든 부분에서 관세가 사라지는 2030년경에는 수 조원의 손실이 예견되고,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풍년기근의 역설은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 먹거리를 사회보장 정책으로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브라질의 벨리오리존치시나, 캐나다의 토론토시의 경우 먹거리 공급자인 농민이 사라져 수입농산물을 이용하고, 농부 복원의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음. 다행스럽게 전주시에는 먹거리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7천여 가구의 농가가 아직 존재.

지역경제 활력이 저하된다 : 전주시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먹거리 소매시장 점유율이 약 80%. 다시 말하면 전주시민 가계먹거리 규모 연간 1조 원 중 800억 이상의 자본이 전주시 지역 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는 해가 갈수록 위축. 또한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개인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전주시에서 전주푸드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여 시민 식량권을 확보하여 시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시책 중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업.
- 전주시민이 1년간 소비하는 식품 구매비용('엔겔지수'라고도 합니다.)은 약 1조원이며, 그 중 전주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0억 원 정도(5%)에 불과.
- 전주시에는 완주군 농가 수(8,604가구, 약 23,000명)에 버금가는 농가(7,137가구, 약 21,538명)가 있고, 무주군이나 장수군에 버금가는 경지면적(6,269ha, 2012년 전주시 통계연보 참조)에서 500가지 이상의 농산물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으나 마땅한 판로가 없어 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설사 전주시내에 개설된 지역로컬푸드 4개소를 포함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전주시민에게 공급한다고 해도 그 수요는 약 3,000명 정도로 대상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직매장과 다양한 유통경로가 필요.

- 전주시 70만 명의 안정된 시민식량권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시 전체를 아우르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순환 먹거리체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일.

전주시민 식량권 보호

- 2004년 11월 UN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가 채택한 '국민 기본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말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전주시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전주시는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음.

제휴푸드

- 전주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산물이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인근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포함)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으로 전주시는 고창·무주·부안·완주·임실·장수·진안 7개 군과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있음.

전주시민이 전주푸드를 이용하면 달라지는 것

- 복잡한 유통단계(국내 농산물 평균 유통단계 7단계)가 줄면서 농민과 소비자의 이득이 높아짐. 또 그동안 멀어졌던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사람간의 대면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소비자는 건강을,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주게 되며 지역 자본의 외부유출을 막아 지역경제가 탄탄해지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음.

전주푸드직매장에서는 포인트 적립과 할인행사가 없다

- 포인트제(마일리지제 포함)는 대기업이 취한 수익금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기업 이미지 홍보 및 소비 충성도 제고, 이익극대화를 도모하는 기업마케팅 수단인 하나.

한편 포인트를 받은 댓가로 제공한 소비자 개인정보는 대기업이 전산화, 분석,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는 결국 소비자본주의의 부속품으로 전락.

- 대기업 매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미끼로 할인, 2+1, 덤, 경품제공 등의 판매방식으로 농산물을 앞세우는 경우도 많음. 이것은 지역농업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또한 복잡한 구조의 포인트제를 규명해보면 대기업이 지급하는 듯이 보이는 비용의 원천은 모두 중소 제조업자, 농민 등 1차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보 제공자인 소비자 역시 일방적 계약, 약관 수정시 소외,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이익보다는 희생이 뒤따르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전주푸드는 쥐꼬리만 한 이익의 사탕발림으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포인트 적립제 등의 적용이 아닌 ①시민 소비자, 전주푸드 생산자의 상생을 담보한 공공성 증진, ②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공급, 생산농가는 안정적인 판로확대 및 소득증대 방안마련을 위한 직거래활성화, ③시민의 안전먹거리 수급만족도를 높여가고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바탕으로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④윤리경영실천 및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운영을 통한 사회공헌 실현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 정립으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고, 좀 더 좋은 세상을 열어가고자 함.

전주시 농민과 전주소비 시민의 관계맺기의 중요성

- 사람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두 말 할 나위가 없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식품관련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데 있음.

- 소비자가 자신들의 먹을거리 생산자를 알게 되면, 생산자도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할 것임.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 푸드시스템(범지구적 식량조달시스템)은 생산자는 커녕, 생산배경, 생산과정도 알 수 없는 먹거리로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집단의 생산물이 대부분으로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뒷전인 경우가 허다함. 따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산하겠다는 전주시 농민과, 먹거리 문맹자에서 음식시민으로 깨어나 지역산 먹거리를 자발적으로 애용하는 전주시 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한 연대만이 글

로벌 푸드시스템(범지구적 식량조달시스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첩경임.

전주지역농업의 중요성

- 단순히 시장중심 논리에서 보자면 소수의 대농가, 단작중심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단기 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실제로 국가차원의 주요 농정은 6ha이상의 규모화를 지향하고 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그러나 이런 농정이 계속되면 우리 농업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족농, 고령농, 여성농업인은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채 농업을 포기하거나, 설 자리를 잃게 됨.

농업도 자본·노동·기술 등 생산요소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토지 면적만으로 농민을 세분화하기는 어렵지만 토지의 경작규모를 기준삼아 농민을 대농·중농·가족소농으로 구분했을 경우 우리나라 전체 농가중 65.7%가 1ha 미만규모의 가족소농이며 전주시는 이보다 높은 71%에 속함.

- 농업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족소농이 살아야 지역농업이 지속가능할 것임. 또 전주시는 도시지역에 속해 있어 농업인구 중 겸업농(4,510가구) 비중이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농 비중도 높음.

- 모든 농업관련 정책은 다수의 농민들이 고르게 잘사는 것에 목표가 맞춰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족소농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가장 좋으면서도 강력한 수단이 지역자립 선순환의 농업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확립하는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임.

전주푸드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 전주시에서 '전주푸드 2025플랜'을 실행하기 위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생산자 농민과 전주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현장실행 조직.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시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6대 정책을 사업으로 추진(①지속가능한 생산체계 확립, ②시민 먹거리접근성 보장, ③통합적 관리체계 확립, ④음식시민 양성, ⑤농업의 6차 산업화와 협동경제 육성, ⑥거버넌스 구축) 15대 전략과제(①기획생산체계 확립, ②공동체에 기반한 지역가공촉진, ③상생형 제휴푸드 연결망 구축, ④시민먹거리 접근성 개선, ⑤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혁신, ⑥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확대, ⑦공공조달 혁신, ⑧지역자원 연계협력, ⑨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⑩생산-유통-소비단계 안전성 관리체계 확립, ⑪소비자 조직화 및 식-농교육 활성화, ⑫농업의 6차 산업화, ⑬협동경제 육성, ⑭전담부서 확대 재편 및 역할 증진, ⑮공공형 재단법인 설치운영)의 실행을 통해 연간 5천여 가족 소농의 안정된 소득과 먹거리가 매개하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연간 2천억 원의 먹거리 선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산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7, Jeonju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의 미래, 지역화
Local futures, Localization

CHAPTER 07

워크숍 3세션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
- 지역화폐와 투자 그웬돌린 홀스미스 (Gwendolyn Hallsmith)
 - 주빌리은행의 경험에 비추어 본 채무탕감 정책과 서민금융의 방향 유종일
 -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검토 이재민

워크숍 3세션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 민선6기 우리 시의 중요한 가치인 생태도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해외 전문가, 국내 유관단체 및 현장기업가 등과 상호 비전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場(장) 마련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심을 제고하여 시민의 인식을 확산 발전시키기 위함.

■ 진행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4:00 ~ 14:10	10'	개회	개회인사, 발제 · 토론자 소개, 내빈소개 워크숍 진행방법안내
14:10 ~ 14:40	30'	발제 1	지역화폐와 투자 그웬돌린 홀스미스 Global Community Initiative 창립자
14:40 ~ 15:10	30'	발제 2	주빌리은행의 경험에 비추어 본 채무탕감 정책과 서민금융의 방향 유종일 KDI 교수
15:10 ~ 15:40	30'	발제 3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검토 이재민 응지세무대 교수
15:40 ~ 15:50	10'	휴식	
15:50 ~ 16:50	60'	종합토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박사 엄영옥 전주시민회 박현정 전주시정책연구소 박사
16:50 ~ 17:40	5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발제 · 토론자와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40 ~ 17:50	10'	마무리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

지역 화폐와 투자

그웬돌린 홀스미스
(Gwendolyn Hallsmith)

워크숍 학습 목표

1. 지역 화폐와 교환을 사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 학습
2. 상호 신용 경험 및 상호 신용 및 부채 기반 화폐의 차이 이해

워크숍 내용 개요

1. 소개(15분) | 참가자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지역 화폐 및 투자와 관련하여 지역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하나를 간단히 설명한다.
2. 프레젠테이션 : 교환 경제(15분) | 지역 경제에서 화폐와 교환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11라운드 경기에 대해 설명한다.
3. 11라운드 게임(20분) | 참가자들이 지역 교환 수단으로서 상호 신용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된 게임을 플레이하고 상호신용과 은행신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방법론, 상호학습경험 및 활동

참가자들이 각 학습 단계에 참여하는 성인학습방법론을 사용한다.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15-20분으로 간단히 진행되고 동료들과 문제를 탐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구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습을 통한 상호 학습이 주를 이룬다. 양방향 활동은 퀴즈와 11라운드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개별 연습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그룹으로 진행되는 11라운드 게임은 워크숍에서 살펴본 모든 개념을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통합해볼 수 있다.

워크숍 자료 개요

1. 파워포인트 자료 : 메모란이 포함된 3개 슬라이드 유인물. 첨부되어 있다.
2. 에이전트 변경 퀴즈 : 양면 출력할 수 있는 두 페이지 분량의 짧은 퀴즈
3. 게임의 규칙 : 파워포인트 형식의 11라운드 게임 규칙. 게임을 효과적으로 플레이하려면 역할 분담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는 인쇄해야 한다.

회의실 배치 설명

소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을 회의실 중앙에 배치하고 워크숍 유인물과 다과를 올려 놓을 긴 테이블을 회의실 앞과 뒤에 각각 배치하는 것이 좋다.



교환 경제

그웬돌린 홀스미스
글로벌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부란?

- 웰빙 소유
- 부 = 욕구 충족

인간의 욕구

- 건강과 웰빙
- 권한 부여 및 책임
- 경제적 안정
- 효율적인 서비스 및 인프라
- 생태계 건강성



자본이란?



- **욕구:** 사회적/문화적, 인간개발, 거버넌스, 재정, 물질 및 환경
- **자산:**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및 제도
- **자본:** 다른 자산을 창출할 역량을 가진 자산.

사회 및 상업적 통화

□ 사회적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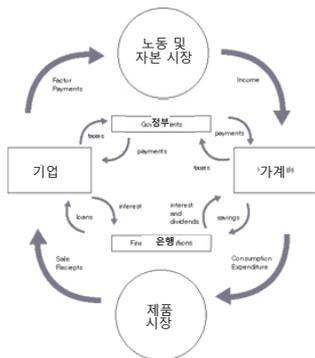
- 빈곤 퇴치
- 건강 및 교육
- 노인 돌봄
- 지역사회 봉사
- 은실가스 감축



□ 상업적 통화:

- 비즈니스 로열티
- 상업적 물물교환
- 명목 화폐

교환의 순환



지역 교환 제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루프 필요

자연자본형성을 촉진하는 통화

- 나무저축(Tree Savings)
- 워터 크레딧(Water Credits)
- 탄소배출권
- 생태복원장치
- 생물다양성 크레딧
- 공민



생태복원통화

□ 시가현: 일본 "비와키푸(Biwa Kippu)" 시스템

거주가가 매년 일정량의 환경 "비와키푸"를 기여하도록 새로운 조례 제정(예 가구당 10 비와).

1 비와는 환경 서비스 활동 1 시간에 해당한다.

통화 및 인간 개발

- 시간 은행
- 돌봄 은행
- 교육 통화
- 웰빙 토큰



시간 은행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 집안일 돕기
- 웰빙
- 집수리
- 교제
- 교육 공동체 활동
- 미술, 공예, 음악
- 교통
- 휴양
- 비즈니스 서비스

일본 후레아이 키푸



돌봄
관계
티켓



몬트필리어 돌봄 은행



- 노인 돌봄 대안
- 돈과 시간 투입
- 보완 및 대체 돌봄
- 생활 활동

교육 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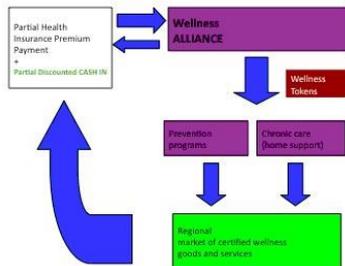
- 브라질 - 사베
 - 리투아니아 - 학습 카운티
- 전화세를 교육기금으로 Doraland 의 리투아니아 전용 학습(Lithanian Learning) 재단 설립

청년들은 또래를 가르쳐 크레딧을 획득한다.
 대학등록금 또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크레딧을 교환한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학 기금과 기업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교육 통화



웰빙 토큰



발리 나라얀 반자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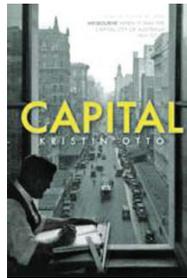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활동



통화 및 물적 자본

- 상업적 물물교환
- 주택 통화
- 식품 통화
- 로얄티 통화
- 지역교환
거래체계(LETS)



상업적 물물교환 제도



WIR: 스위스의 상업적 물물교환 네트워크

	1973 년	2003 년
참가자 수	20,402 명	76,618 명
매출 - 스위스 프랑	1 억 9600 만	25 억 2100 만
진액 - 스위스 프랑	8300 만	10 억 2800 만

버몬트의 상업적 물물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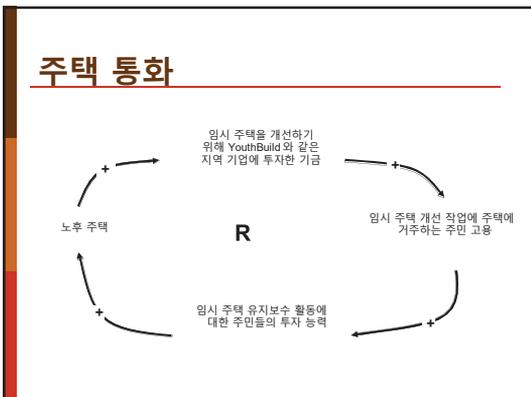


<http://www.changethemarket.com>

주 전역에서 수백 명의 회원 확보
 VBSR 는 지속 가능한 교환을 비즈니스
 시장으로 사용한다







식품 통화



- 농장 가판대
- 전자 결제 게이트웨이
- 식품 저장 통화
- 식품 크레딧
- 사업 기회

로열티 통화



- 지역 구매 보상
- “단골” 마일리지
- 펀치카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모든 지역 기업에서 고객 충성도 공유

LETS: 지역교환 거래체계

- 상호 신용 제도
- 재화와 용역으로 지원
- 네트워크의 다른 회원에게 재화와 용역 제공

피터버러

설립	1994년
활동 중인 회원	200
총거래액(현재까지)	\$375,000
99-00년 거래액	\$57,200
개인회원 회비	\$15~\$35
기업회원 회비	\$35~\$100

설립
활동 중인 회원
총 거래액 (현재까지)
99-00년 거래액
개인회원 회비
기업회원 회비

지역 명예 통화

- "명예(Fiat)" 통화는 중앙 당국이 발행한다
- 발행자의 보증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 통화를 관리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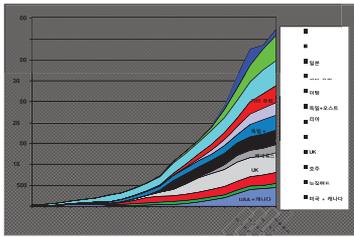




보완 통화 제도 운영 국가



새로운 통화의 성장



12 개국의 사회적 보완 통화 수(1984-2003) 출처: Bernard Lietaer

통화 생태계

- 자연
- 예술 및 문화
- 인간의 웰빙
- 상품
- 서비스
- 참여
- 공동체



공동체 활동



- 단계별 워크북
- 무료 다운로드
- 기타 자료:

www.global-community.org
www.global-laser.org

11 라운드 게임 규칙

- 1 라운드 - 참가자들에게 규칙과 IOU 메모 전달. 상호 신용을 사용해 교환한다.
- 2 라운드 - 참가자들은 은행권을 받고 라운드가 끝날 때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 게임 토론

종료



목수

Carpenter

목수

Carpenter

제빵사

Baker

제빵사

Baker

벌목꾼

Lumberjack

톱질꾼

Sawyer

톱질꾼

Sawyer

벌목꾼

Lumberjack

정육점 주인

Butcher

농부

Farmer

농부

Farmer

식료품점 주인

Grocer

농부

Farmer

보석상

Jeweler

촛대 제작자

Candlestick Maker

방직공

Weaver

재단사

Tailor

재단사

Tailor

방직공

Weaver

양치기

Shepherd

치즈 제작자

Cheesemaker

하드웨어

Hardware

화공

Painter

예술가

Artist

작가

Writer

음악가

Musician

관리자

Manager

법률가

Lawyer

회계담당자

Bookkeeper

시장

Mayor

경찰

Police

소방관

Firefighter

주빌리은행의 경험에 비추어 본 채무탕감 정책과 서민금융의 방향

유종일

주빌리은행 대표 /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근 정부는 25조7천억 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겠다는 채무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수혜자는 214만3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채권의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죽은 채권인데, 시효연장으로 부활하여 채무자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탕감 정책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는" 정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채무탕감 정책은 채무자들에게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서민금융을 위축시키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본고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묶여 신음하는 이들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고 새 출발을 돕는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주빌리은행의 경험을 토대로 채무탕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평가하고, 서민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빌리은행의 경험과 성과

주빌리은행은 상법상의 은행은 아니며, 채무취약계층의 사회적 구제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2015년 8월에 출범하여 이제 막 2년이 경과하였다.

채무취약계층의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2013년 금융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의 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히 채무조정이나 탕감이 필요한' 채무취약계층이 350만명에 달하고, '소득활동이 전무하여 경제생활이 단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빚독촉을 받고 있는' 장기연체자가 114만명이라고 한다. 2012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111만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인권을 짓밟는 부당한 추심이 만연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을 경험한 사람의 76%가 정신적 고통, 생명의 위협, 가족관계 단절, 직장생활 곤란 및 실직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것이다.

주빌리은행은 장기연체자들을 지옥같은 채권추심에서 해방하고 재기의 희망을 주기 위해 부실채권 매입 및 소각, 금융복지상담, 채무자 교육, 금융제도 개혁운동 등 네 가지 활동을 전개해왔다. 첫째, 부실채권 매입 및 소각 활동은 공식 출범 이전인 2014년 4월의 첫 부실채권 소각 행사 이래 2017년 7월까지 36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3만8천 명이 넘는 채무자들의 6천300억 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하고 이들에게 빚탕감 안내장

을 발송하였다. 둘째, 이러한 채권소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들을 위해서는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채권사 및 채무금액 파악, 채무조정 제도 안내, 재무상담, 복지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는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각 지자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찾아가는 주빌리 상담소를 운영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출장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셋째, 채무자들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소모임을 진행한다. 넷째,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과 장기연체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빌리은행은 6천300억원을 상회하는 액수의 부실채권을 소각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처음 시작할 때 1년 동안 천억 원 탕감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나, 이 운동의 원형인 '롤링 주빌리'(월가 점령시위 이후 전개된 채무자 운동)가 약 350억 원 정도의 채권을 소각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큰 성과임에 틀림 없다. 개인의 성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기업, 종교단체 등과 함께 빚 탕감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 주효한 덕분이다.

채권 소각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권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2억6천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빌리은행이 소각한 부실채권 중 많은 부분이 무상으로 기부 받은 덕분이기도 하고, 또한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이 채권액의 2~3% 혹은 심지어 0.1%에 불과한 싼 값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심업체나 대부업체는 이렇게 헐값에 부실채권을 확보하여 고강도 추심을 진행함으로써 장기연체자들을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주빌리은행이 부실채권 소각에 주력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법과 제도적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가 채무취약계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과 같은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게 된 이면에는 이러한 주빌리은행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채무탕감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장기연체자의 채무 탕감은 그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다. 단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인간적 추심에 노출되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며,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 하는 비정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압도적 다수는 자산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로서 불운한 희생자일 따름이다. 어느 누구도 경제적 궁핍과 불운 때문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희망을 송두리 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회정의가 요구하는 최소한이다.

채무에 짓눌린 사람들을 그 부담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강도 높은 채권 추심에 노출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 설사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노력의 대가가 본인의 궁핍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사용되기보다는 채무상환에 사용된다면 어려움을 이기고 열심히 노력할 유인이 사라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러한 '채무 후유증(debt hangover)'이 초래하는 인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보다 채무 탕감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

이 더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빚 탕감 얘기가 나오면 언제나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조장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고생하며 빚을 갚은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변제 의무를 저버린 사람을 도와준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 탕감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주빌리은행이나 새 정부가 탕감의 대상으로 삼는 채무는 한마디로 갚지 않는 빚이 아니라 갚지 못하는 빚이고, 그러기에 도덕적 해이 나 형평성 문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채무자 권리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또한 인식해야 한다.

소액 장기연체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틴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빚을 갚지 못한 것뿐이며, 대부분 이를 매우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는 원금 이상의 금액을 이미 변제했으나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연체자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고강도 추심과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장기간 감내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주었다고 해서 자신도 이와 같은 고통을 10년 이상 감당하며 채무 탕감의 수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주빌리은행에서 채권을 소각하고 빚탕감 안내서를 발송하면, 그동안 추심에 쫓겨 잠적한 탓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태반인 것이 현실이다.

채무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다면 채권자에게는 신중한 대출의 의무가 있다. 채무자의 갚을 능력과 의지를 잘 판단해서 돈을 빌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신용평가 능력은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역량이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실제로는 방만한 대출을 하고 결과적으로 부실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우선 금융회사들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를 비롯한 남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단기적 수익에 눈이 멀어 함부로 대출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그러다가 과도한 부실로 금융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여 정부가 구제해주는 일이 허다하다. 외환위기 당시에 시중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그랬고, 이후 카드사나 저축은행들도 그랬다. 구제금융에 대한 잠재적 기대는 마구잡이 대출을 더욱 조장한다. 이것이 전형적인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다.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은 채무자의 인권과 최소한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하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과도한 추심의 허용이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극심한 추심을 예견하고도 채무자가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을 테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런 추심으로 채무자의 고혈을 빨아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하게 된다. 이로써 지금 우리나라는 '빚 권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채무탕감이나 최고금리 인하, 과도한 추심 제한 등 채무자 권리 보호는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흔히 채무탕감을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의 신중한 대출을 유도하고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여 금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서민금융의 바람직한 방향

채무탕감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조정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갚을 수 없는 채무로 고통받는 모든 채무자들을 실질적으로 빚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채무탕감의 주체와 운영 원리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무탕감의 궁극적 목적은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의 재기와 경제적 자활이다. 단순히 기존의 채무를 없애주는 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 등을 통하여 이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채무탕감은 어차피 일회성 정책이고 대중적 처방이다. 근원적인 처방은 애초에 서민들의 장기연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금융제도의 개혁이다. 채권자의 책임과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며, 서민금융의 역할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채권자의 책임과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은 대출 단계, 부실 발생 초기단계, 장기연체 단계 등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대출 단계에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LTV, DTI, DSR 등의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애초에 갚기 어려운 빚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부실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는 채무조정을 의무화하고, 부실채권 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적절한 채무조정의 노력도 없이 고강도 추심이 계속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연장이나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현행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채무자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채권자의 책임과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면 자칫 서민금융 시장이 위축되어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을 회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작용으로서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서민금융의 역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중금리 대출이 제공되도록 서민금융을 설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과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민금융이라는 미명 하에 만성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서민들이 빚을 내도록 도와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주빌리은행의 금융복지상담 케이스를 분석해보면 만성적인 생활비 부족을 빚으로 보충하다가 헤어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진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이 아닌 고용과 복지로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하다. 복지체계를 충실하게 갖추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서민들이 당장 생계가 어려워 갚을 수도 없는 빚을 냈다가 끝 모를 고통의 나락에 빠지는 일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제도권 서민금융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를 충실하게 한다면 서민들의 고금리 급전 수요는 억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요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측면의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대부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고강도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기초적인 금융지식을 갖추도록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또한 현재 극히 일부의 지자체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검토

이재민¹⁾

2016년 10월 강원도가 광역 단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강원도 내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인 "강원"을 발행하였다. 강원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의 소비촉진, 내수증가, 고용창출을 통해 외부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독립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 70여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작하는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약 50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2016년 판매액은 1,000억원(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8,500억원)에 이른다. 행자부는 지역사랑상품권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 등을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²⁾로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했다. 또한 아동수당과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상당히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품권발행에 법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의 대표적 사례들

화천사랑상품권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생과 유통을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지역금융지원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산천어축제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의 "화천사랑상품권"(2003년 첫 발행)을 꼽고 있다.

화천군은 산천어축제 체험료의 절반 이상을 화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화천사랑 상품권의 약 32%가 산천어축제가 열리는 1월에 집중 판매되어 약 5억 6,000만

1)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정책위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용지세무대학교 교수

2) 지역화폐란 국정화폐와 달리 특정 대상이나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국정화폐대용 거래수단을 의미한다. 온누리상품권, 도서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LETS, TIME BANK, Point 등이 다 광의의 지역화폐이다.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공동체를 회복할 목적으로 설계한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입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순환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실증은 아직 없다.

원(2016년 총판매액 17억 3,800만 원) 규모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2017년 화천쪽배축제는 '월업편주'와 카약, 카누, 범퍼보트, 키드존, 워터 슬라이드, 야외 물놀이장, 하늘 가르기, 물놀이장, 애니멀 존 등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졌고, 짚라인을 제외한 모든 즐길 거리 이용료가 30분에 1만 원 정도인데, 이용을 마치면 화천사랑상품권 5,000원 권으로 반환해주었다.

성남사랑상품권

성남시는 복지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 지자체로 유명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대무상복지"를 내걸고 지원금의 50%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다.

청년배당 | 만 24세 이상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서 2016년 기준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중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산후조리지원금 | 부부 중 1명만 1년 이상 성남시민이면 산모에게 지급하는 산후조리지원금 50만원 중 25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무상교복 | 2016년 성남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교복지원금 285,650 중 15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성남시는 또 지난해 생활임금(시급 7,000원)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시급 6,030원)과의 차액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는 현금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하면 6%의 할인 혜택을 준다. 명절 때는 할인율을 10%로 인상하였는 정책은 2016년부터 없었다.

포항사랑상품권

포항시는 2017년 포항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하고 연 판매목표를 1,000억 원으로 잡았다. 1월에는 할인율 10%로 300억 원이 판매됐으며, 2단계로 300억원을 발행하여 할인율을 6%로 낮추어 판매하고 있다. 2월 19억 원, 3월 42억 원, 4월 38억 원, 5월 47억 원, 6월 50억 원이 판매되어 6월말 누적판매실적은 500억 원이다. 2017년 6월말 현재 12,000여 상품권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판매촉진을 위해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기간 중 5만 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한 시민들에게는 해외여행 등의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포항시 상품권 발행 경제효과 추정

- 2,000억원 이상 현금유동성 추가 발생
-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 상품권 액면가액 20% 추가 소비증대 효과
- 상품권 10% 할인 때론 가계수입 증대
- 가맹사업자 연간 1,300여만원 매출 증대(가맹점 1만개)

강원사랑상품권

수년간의 검토를 마친 강원도는 연간 3조원이 넘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순환경제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2016년 말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통시켰다. 2017년 1월에 30억 원, 2017년 전체로 280억 원을 유통시킬 전망이다. 7월말 현재 강원상품권 가맹점은 6,921개소로 확대되었다.

강원도는 노인소득보장증진사업(80%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 청년구인구직활동지원 등 복지정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달 「오늘은 강원도의 돈 강원상품권 쓰는 날!」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강원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사랑상품권 시군 발행 현황〉³⁾

지역	최초발행일	2015년 판매액	총 판매 누적액
화천	1996. 4	15억 4,100만원	142억 8,600만원
태백	1999. 10	13억 1,299만원	97억 4,000만원
삼척	2000. 12	31억 5,000만원	207억 6,700만원
양구	2007. 6	84억 3,000만원	524억원
고성	2007. 10	7억 2,000만원	35억 2,000만원
정선	2013. 5	10억 3,000만원	23억 2,000만원
인제	2013. 8	7억원	12억 9,600만원
철원	2016. 4 발행	50억원(2016년)	-
총액		168억 8,399만원	1,043억 2,900만원

2017년 7월 말 현재 강원상품권은 일반용으로 총 280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이중 16%인 45억원만 유통되었다. 시군비 20%를 포함한 비상경제 일자리 지원용은 750억원이 발행되었다.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전략

할인판매

대부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은 3~5% 정도의 할인으로 판매한다. 명절 때는 10%까지 할인하기도 한다. 강원사랑상품권은 할인판매가 없으나, 포항사랑상품권은 처음에 10% 할인 판매하였고, 현재는 6% 할인 판매하고 있다.

공무원 복지수당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3)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2016. 1. 28 기사)

많은 지자체에서 본인들의 동의 하에 지자체들은 공무원급여 일부(수당의 일부, 임금의 5% 등)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축제 등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반환

화천 산천어축제의 입장료, 춘천 소양호 스카이워크 입장료(외지인 1인당 2,000원), 서천 장항스카이워크 입장료(1인당 2,000원) 등의 일부를 상품권되돌려 준다. 화천의 쪽배축제에서는 자건거 이용료의 50%를 상품권으로 반환하여 지역가맹점에서 사용하게 유도한다.

공기업 등의 보너스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유

강원도는 직장의 휴가비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기업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권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보조금, 이주비, 시상금, 격려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도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3~8%, 용역과 물품구매는 5%, 행사와 민간보조는 8%를 강원상품권 구입에 사용하도록 권장 기준을 설정했다.⁴⁾ 비상경제 일자리(어르신, 청년) 특별지원 대책 예산 6백억 원도 별도 편성해 수당과 임금 등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⁵⁾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다.

일정액 이상 구입하면 경품지급

포항시는 축제기간에 5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여행권을 준다.

결제방식의 편리성 개선

포항시는 한동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사랑상품권의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홈페이지 가맹점을 올려놓고 있으나, 어떤 곳은 휴대폰 앱을 통해서 가맹점의 검색 기능과 길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판매금액 보전

상품권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판매하고 환전하고 있다. 지자체는 제휴금융기관에 할인 판매액과 수수료를 예산에서 지급한다.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으면 결제시의 수수료와 카드결제시 수수료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 백오인기자 강원도민일보(2017. 6. 25 기사)

5) <http://www.nocutnews.co.kr/news/4810677>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애로 사항

사용처의 제한

은누리상품권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는 없으나, 전통시장의 판매를 촉진시킬 수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생필품 판매상의 매출을 늘릴 수 있으나, 재래시장 이외로 구매력이 빠져나간다. 두 상품권은 모두 가맹점만 환전이 가능하며 재판매는 불가능하다.(행자부는 반복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통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특정 상품권을 더 선호할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의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불만이 발생하고, 일자리사업 지원자가 준 것은 당연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직접 가져다 주는 것이 맞지만 분실 등의 위험도 있어 복지사들의 부담과 스트레스가 커졌다.⁶⁾

임금 및 수당의 "현금불 원칙" 위법성

여러 지자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유통시키기 위해 수당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봉급과 각종 수당을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한 공무원 보수규정(제18조)과 지방재정법(제70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지불원칙에도 위배된다.

결제의 불편함

지역사랑상품권은 60~80%를 사용해야만 잔전을 현금으로 내준다. 현금이나 카드와 달리 적은 금액을 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고액권도 발행할 수 없다. 사용자는 가맹점을 찾아가는 어려움도 있지만, 기업형대형마트, 백화점, 주점, 고급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도 있다. 가맹점은 현금화에 시간이 들기 때문에 불편하고, 판매액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발행비 부담

강원도의 경우 상품권 환전에만 2% 수수료를 농협에 내고, 장당 평균 인쇄비 100원 가량을 조폐공사(위조방지 위해 불가피)에 납부한다. 올해 880억 원 규모 강원상품권을 발행하면 발행비용, 판매 환전 수수료, 홍보비, 전산시스템 구축, 인건비 등 소요경비는 36억 6천 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⁷⁾

6) 진유정 기자 강원CBS(2017. 7. 12)

7) 박정민 기자, 강원도CBS (2017. 6. 20)

수수료 비용 발생

10~6% 할인해서 판매하는 포항시는 올해 목표인 1,000억원을 판매하면 상품권사업에 책정된 109억원의 예산을 대부분을 할인된 금액 메꾸는 데 써야 한다. 결국, 시민들에 대한 중소기업의 할인판매액을 정부세금으로 지원하는 셈이 된다.

"깡"과 상점의 "환전차익"

할인판매에 한도를 두고 있지만, 포항시와 같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가맹점들이 환전차익을 노리고 많은 수량을 구입하여 거래 없이 환전해 차익을 얻으려 한다. 실제로 거래 환전자 40개소를 점검하여 8개 소가 부당하게 환전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각종 복지수당, 경품(상금) 등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높은 할인가격으로 되팔아 현금화시키는 "깡"의 대상이 된다.

보조금 등의 상품권 구매 강제 위법성⁸⁾

행자부는 강원도 조례의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과 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은 지방계약법(제6조), 행정규제 기본법(제4조)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우리문화상품권'은 지폐이코리아가 직능단체 경제인 총연합회, 골목상권 지키기 소비자연맹, 소상공인 연합회와 손잡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민간주도형 범국민 경제활성화용으로 발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류현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단장(지폐이코리아 대표)은 "이달부터 직능단체경제인 총연합회 산하 290단체를 통해 1차로 가맹점을 10만개 이상 확보하고 향후 30만개까지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구군 등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이미 활성화된 지자체에서는 경품축제를 연계하는 방안, 단체관광객의 경우 여행사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1인 기준 당일 5천원, 숙박 1만원)하는 방안, 출산 및 전입 장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무엇을 실패하고 무엇을 성공했는가?

스카이워크의 입장료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전략에 성공한 춘천은 의회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 유통을 밀어붙인 강원도는 의회차원에서 강원상품권의 폐지 검토를 권고하고 있다.⁹⁾ 포항시는 올해 1,000억원어치의 상품권 판매를 낙관하고 있으나 아직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럼 성패를 결정짓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8) 한국일보 박은선 기자(2017. 7. 23)

9) 강원도가 올해 1월 30억원 규모의 강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현재 판매액은 10% 수준인 3억 3천여만 원에 불과하며, 일각에서는 '장농 화폐', '공무원 전용 지폐'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업종을 살리는 데는 기여

사용이 제한되는 구매자에게는 불편함이지만 지역화폐는 돈의 흐름을 제약한다. 화천, 포항, 성남, 강원도 모두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매출을 신장시켰다.

역외구매력의 유입에는 성공했으나, 자금의 역외유출방지는 미미

축제 등에서 입장료를 상품권으로 반환해준 곳은 대부분 성공하였다.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지역에서 추가적인 수요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소비대체현상(어차피 구매할 것을 상품권으로 구매하는 현상)과 회수율(구매된 후 가맹점이 현금으로 바꿈)이 낮아 자금의 역외유출방지효과(타지의 상품을 가져다 판다면 자금유출은 불가피하므로 역내 생산품에 대한 지출을 유도해야 효과가 큼)는 미미했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효과적

청년수당, 생활임금 등 댓가 없이 지급한 복지수당은 성공하였으나, 공무원수당, 노인일자리정책 등 노동의 댓가로 지불한 경우는 거부감이 컸다.

경제적 유인으로는 실패, 다른 유인으로는 성공

지역화폐는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만으로 설계될 때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해야만 작동한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막대한 세금으로 메우는 포항의 성공은 지속될 수 없다.¹⁰⁾ 이것은 낮은 회수율이 입증한다. 특히 상품권을 화폐처럼 반복사용하게 하려면 할인이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유통에서 할인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강원도와 포항에서 배워서 안된다. 화천에서 배워야한다. 특히 전주에는 한옥 마을이 있고, 많은 축제가 있다. 자전거나 스카이워크를 활용한 지역상품권의 유통은 내구재인 공유자원이나 공공재를 지역화폐도입으로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에 활용가능한지 잘 보여준다.

10)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는 달리 주유소가 사용처로 등록돼 있다" 며 "거기다 10%나 할인되니 법인들이 몰려와 사들였다.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주유비가 큰 지출을 차지하지 않느냐" 고 말했다. 또 "일반 시민들, 소위 '깡' 치기를 하려는 상인도 10%라는 높은 할인율 때문에 난리였다" (백경서 기자, 중앙일보, 2017. 7. 5 기사)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conomics of Happiness 2017, Jeonju
2017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Governance for Localization

CHAPTER 08

주제강연 2

-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홍종호**
 - 지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윤난실**
 - 내 삶을 바꾸는 동네 정치 **김영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전략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국내 에너지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국가 주도 하에 산업 및 경제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에너지수급 밸런스를 보면, 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 1차 에너지 공급량의 94.8%를 수입하였다. 1981년부터 GDP와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소비 간 증가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증가에 따른 기술 발전,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수급 관련 우리나라 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 비교 분석해 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에너지 수입량이 많은 국가로 꼽힌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매 5년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 방향과 에너지원별 구성 등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2년마다 작성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구체적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해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가장 최근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전력수요 전망이 과도하게 추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현황과 잠재성

최근 들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상대적으로 빠른 추세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정의 및 분류가 국제기준과 상이한 바, 국제에너지기구(이하 IEA) 기준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5년 1.4%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2014년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잠재량 관련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계로 인해 시장 잠재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추정할 결과, 연간 564T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석유환산톤으로 나타내면 연간 48,530천toe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농지, 임야 등 지상부와 수상에 태양광이 확대·보급되는 것으로 보고, 풍력에서는 삼면이 바다인 점을 고려하여 해상풍력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잠재량 추산

에서 바이오매스 수입, 수퍼 전력망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재생에너지 전력 수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2050 에너지전환 관련 문헌

2016년 스탠포드 대학 Mark Jacobson 교수가 발표한 연구는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 가능하다는 담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100% Clean and Renewable Wind, Water, and Sunlight(이하 WWS)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최종에너지 수요가 100% 전력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The Energy Report (2012)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린피스(Greenpeace)의 Energy Revolution 2012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2개의 대안 시나리오를 통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IEA에서 발간한 「World Energy Outlook 2016」은 2040년까지의 글로벌 에너지 전망을 제시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정책,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주안을 두어 국제 에너지 시장 및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정책(New Policies)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총 1차 에너지 소비가 2014년 대비 2040년까지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 확대된다. 반면 탈탄소 시나리오에서는 1차 에너지 소비는 2014년 대비 2040년에 6% 증가에 그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 감소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2050 에너지 시나리오 구축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5%에 달해 에너지 안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원전 안전 우려, 화석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문제 등 또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의 4대 원칙으로 ●에너지 안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준(BAU) 시나리오 외에 ●Moderate Transition Scenario(MTS), ●Advanced Transition Scenario(ATS), ●Visionary Transition Scenario(VTS) 등 총 세 개의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IEA에서 전망한 2040년까지 OECD 유럽 국가들의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비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중·장기적으로 감축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원자력 및 석탄화력 등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 주안을 두어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45%(MTS) ~ 55%(ATS)로 확대하는 경로와 100%까지 확대하는 탈원전 및 탈탄소 경로를 각각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해 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분석 및 전망 모형인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을 활용하였다. 수요 시나리오의 경우 2014년 대비 2050년까지 총 에너지 수요량을 MTS와 ATS 시나리오 각각 7%, 2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기존 발전과 에너지 공급 패턴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되는 경로를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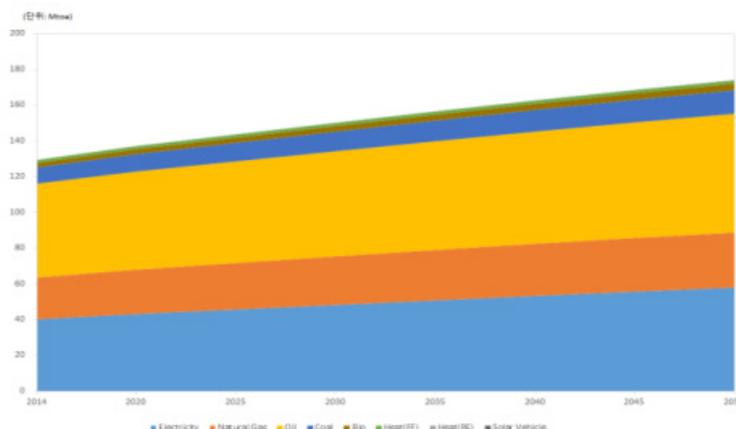
기준 시나리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6 장기 에너지 전망」을 토대로 반영하였으며,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원자력 발전이 상당 부분 이를 대체한다고 가정하였다. MTS에서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45%로 도출되었고, 발전 부문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 수명에 따라 2050년 이후에도 운영가능한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설계수명에 따른 중앙집중형 발전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ATS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전제하였고, 복합화력, LPG, 도시가스 비중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대체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VTS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및 석탄화력 등 모든 중앙집중형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에너지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분석 및 전망

기준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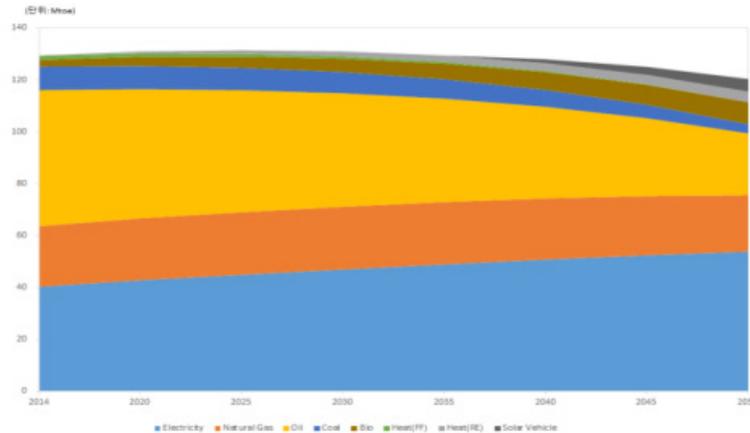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4년 대비 2050년에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량은 전력화 현상으로 인해 2014년 480TWh에서 2050년 675TWh로 29% 상승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540.6MtCO₂ eq에서 2050년 640.2MtCO₂ eq로 18.4% 증가한다.



Moderate Transition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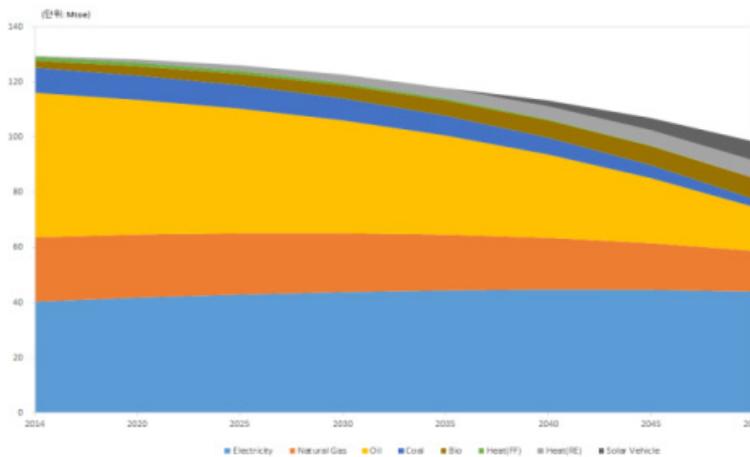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4년 대비 2050년에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량은 2014년 480TWh에서 2050년 626TWh로 23.3% 확대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540.6MtCO₂ eq에서

2050년 264.7MtCO² eq로 51.0%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Advanced Transition 시나리오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는 2014년 대비 2050년에 24% 감축된다. 발전량의 경우 2014년 480TWh에서 2050년 512TWh로 7% 상승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540.6MtCO² eq에서 2050년 169.1MtCO² eq로 68.7% 감소한다.



Visionary Transition 시나리오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는 ATS 전망과 동일하다. 발전량의 경우 2014년 480TWh에서 2050년 850TWh로 45% 늘어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 540.6MtCO² eq에서 2050년 32.2MtCO² eq로 94.0% 감소한다.

정책 과제

현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 혁신기술 개발 등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받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각 시나리오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구분		MTS	ATS	VTS
수요 측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요금 현실화(전력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반영) ·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제 실시 		
	시나리오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연비개선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 · 수송부문 연료전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에너지효율 획기적 개선 ·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 · 태양광 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 산업부문 전력화 대폭 확대
공급 측면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S 및 FIT 확대 실시 · 재생에너지 R&D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시나리오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및 풍력 보급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및 풍력 보급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 그리드망 구축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은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 구현에 대한 합의가 뒷받침될 때 정책 실효성은 더욱 제고되기 때문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 등의 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점진적인 탈원전과 탈석탄 추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실효성 및 국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전 수립과 제도 마련,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 형성, 에너지 전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해소,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민관 소통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

윤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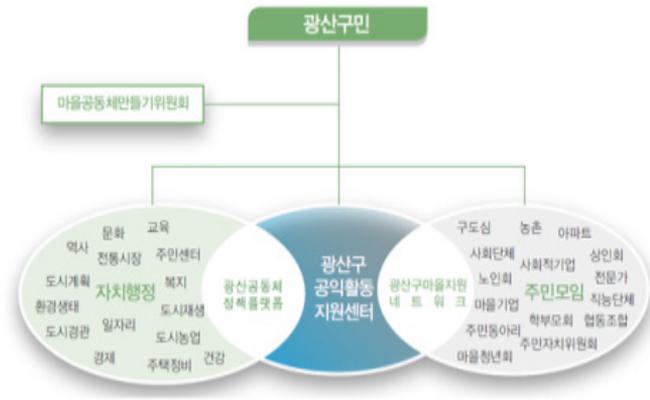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 사람을 더하고, 가치를 나누다.

광산구는 민선5기부터 모든 행정의 중심을 주민에 두고, 주민참여·주민자치 활성화에 집중해왔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해 2013년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풀뿌리 마을운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호혜와 협력의 공동체 형성을 주도해 오고 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행정과 민간이 가진 장점(행정:공신력, 정보력, 자원활용력/민간:연속성, 탄력성,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한계(행정:단속적, 칸막이/민간:재원의 문제, 약한 공신력)를 보완하면서 행정과 민간을 잇는 매개자 및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거버넌스 시스템구축을 주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자율모임과 사회적경제 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영역을 포괄하는 '광산구마을지원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주민과 주민이 서로돕기를 통해 마을공동체 관계망을 넓히고 있으며, 마을활동에 연관된 행정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공동체 추진업무의 공유·협업·조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광산공동체 정책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산구 21개동 자치팀장 네트워크, 광산마을활동가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협의회, 협동조합 협의회 등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선순환구조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활동 근간에는 행정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서 '지원·협력'으로 관점을 전환시켜, 행정의 지원 아래 주민주도의 활동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화 사례

병원아동보호서비스

1. 추진배경

1) 양육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마련 시급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양육 관련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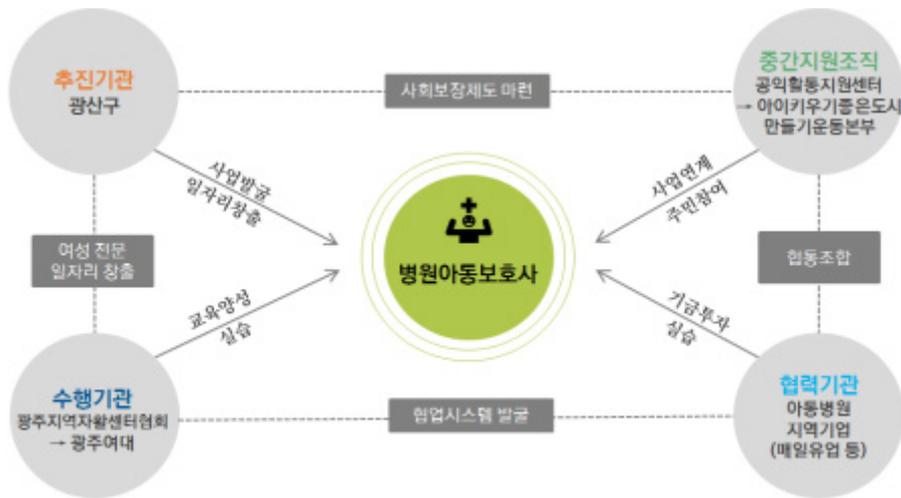
- 양육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양육 관련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 아이의 갑작스러운 입원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필요
- 아동 간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교육과정의 요구와 더불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추가교육 필요성 대두

2) 지역산업 맞춤형 창의적 일자리 창출

- 광주 생산량 50%를 차지하는 산업도시 광산에 맞는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장 서비스가 적극 요구됨
- 광산구 인구밀집 지역은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주로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고 아이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가 많아 입원아동에 대한 지원시스템 필요
- 근로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기업과 병원아동 지원을 위한 병원 등의 사업협력체계 구축 용이
- 광산구의 사회적경제 중심 협력사업 등이 선도적으로 발굴되고 시행됨으로써 여성 일자리, 육아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2. 참여기관 네트워크 구축



3. 성과

1) 여성 친화형 신규 일자리 창출

- 국내 최초 '병원아동보호사' 신직업 창출
- 경력단절 여성 중심의 일자리 지원정책 수립
- 기존 근로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지원
- 협동조합을 통한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2) '병원아동보호사' 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사업

- 병원아동보호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병원 아동 정서안정 특화 프로그램 추가 운영 → 그림책 교육(광산구 자체 추가교육, 15시간)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사인력풀 구축

3)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협력시스템 구축

- 일자리 협력망을 위한 일자리 포럼 개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병원간담회 운영
- 광산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동본부 구축
- 광주 아동병원 간 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후속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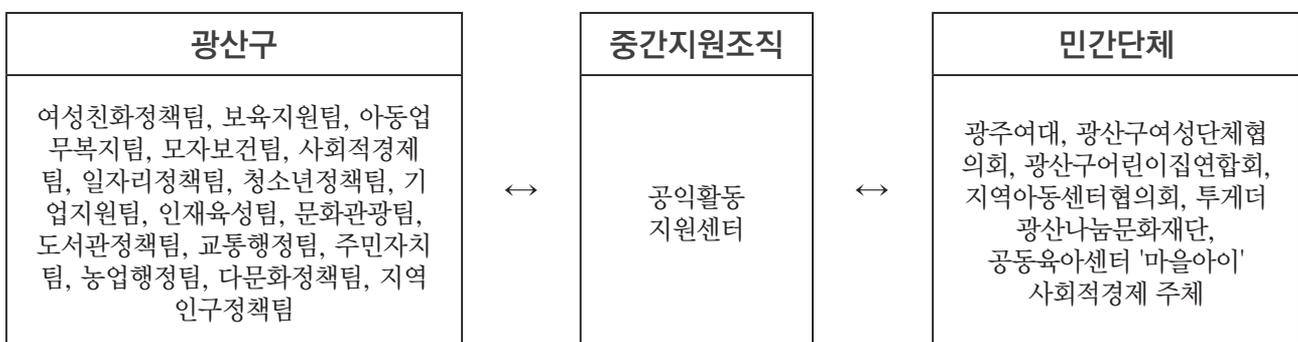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병원아동보호서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의 공공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간의 자원을 모으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요양보호서비스	수면컨설턴트 양성사업	마을안전지도사 강사양성사업
치매전문 간병사를 양성하여 치매병원에 파견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의 심리치료 및 보호자의 수면교육에 대한 컨설팅	마을안전지킴이를 양성하여 학교에서 전문강사로 활용

아이키우기 좋은마을 광산 운동본부

1. 배경

- 인구절벽에 따른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단위의 다양한 해결방안모델 제시
- 아이키우기 좋은 광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각 주체들의 협력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전국적으로 가장 젊은 도시 광산의 활력있는 브랜드 이미지 창출
-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광산을 만들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함



2. 준비 TF 및 추진경과

- 1차(2/15) 운동본부 추진에 대한 논의
- 2차(3/2) 민간 협력주체 보완 및 분과구성
- 3차(3/16) 분과별 사업방향 및 기능 논의
- 4차(4/3) 정책포럼 개최
- 5차(4/21) 정책포럼 2 개최
- 6차(5/17) 운동본부 활동범위, 핵심과제, 직체계 논의
- 7차(6/1) 운동본부 명칭, 분과별 주요사업, 출범식 논의

3. 운동본부 구성

1) 민·관거버넌스 현황

- 보육 : 어린이집, 유치원 등 445개
- 아동 : 지역아동센터 5개
- 병원 : 아동병원 5개
- 대학 : 광주여대 외 4개
- 기업 : 산단협의회(5개 산단), 매일유업
- 여성 :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센터, 광주맘스팜 등
-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10개
- 청소년 : 야호센터, 청소년수련관 2개
- 교육 : 관내 초등학교 44곳, 중학교 37개
- 도서관 : 구 직영 도서관 5곳, 작은도서관 30개

2) 조직도



4. 주요사업과제

1) 보육교사 수호천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 어린이집(449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보육의 중요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
- 보육교사 경력단절 교사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하여 관내 어린이집 대상 대체교사 파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2) 광산 마더박스(mother box) 사업

- 임신 및 출산을 축하하는 '육아용품' 지원
-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생산한 제품으로 구성
-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홍보효과 극대화

3) 아파트 공동육아사랑방 사업

- '나 혼자' 육아가 아닌 '우리 함께' 육아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마을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공동육아, 야간돌봄 등)
- 작은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여유공간 활용

4) 광산 아이사랑 기업 선정 캠페인

-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육아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가족친화기업' 선정

모태보태 마을장터

1. 배경

- 마을사람들이 직접 만든 살림거리와 재능을 서로 나누는 마을공유장터를 통해 주민 교류 및 풀뿌리 지역경제 토대 만들기
- 마을공유장터, 재능나누기교육,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축제, 어린이·청소년 나눔장터 및 사회적경제 체험으로 광산구 공유의 거리 조성
- 수공예인들의 교류활성화로 지역 사회적경제 이바지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전 모색

2. 진행경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는 주민간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모태보태 마을장터를 열고 있다. 손으로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주민·소규모 셀러를 모집하여 '모태보태 사람들'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매월 공익센터, 동네공원, 도서관 등에서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마을공유장터	수세미, 인형, 앞치마, 도자기 찬그릇 등 집에서 직접 만든 살림거리를 나누고 교환하는 장터
지역살림장터	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만든 제품 판매
살림 도깨비방망이	집안에 잘 쓰지 않는 물품을 공예작업을 통해 새 살림으로 만들기
재능기부 공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통한 공연진행

살림살이 함께 만들기	지역 공예인이 강사로 나서 지갑, 수세미, 천연모기퇴치제, 다용도함 등 집안 살림살이 만들어보기 체험
어린이중고장터	책, 장난감 등 잘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어린이장터
청소년 장보고 상인	청소년 사회적경제 경험을 위한 공정무역커피 노천카페 운영
계절체험	많이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숲체험, 전통놀이체험, 보드게임체험 등을 시기에 맞게 진행

3. 사업의 기대효과



- 작은 살림살이 정도는 마을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나누는 공유문화 확산
- 마을공유장터 문화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및 미래세대 사회적경제 경험 공유
- 마을사람들과 함께 마을공유장터 및 재능기부 공연을 펼쳐냄으로써 공동체 행사 경험 축적
- 수공예인들의 교류 활성화로 지역 사회적경제 토대 마련
- 공유의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자원, 환경문제 함께 고민

내 삶을 바꾸는 동네 정치

김영배
성북구청장

목 차

1. 마을공동체 부활의 길 : 마을민주주의
 - 1) 중앙권력에서 현장권력으로
 - 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융합
 - 3) 우리 시대 민주주의는 마을민주주의
2. 마을민주주의 거버넌스를 위한 토대 구축
 - 1) 수요자와 과제 중심의 협업 체계
 - 2) 사회적경제 정책의 민간 파트너와 협업
 - 3) 사회적경제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
3. 성북구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
 - 1) 마음이 모여 만드는 마을: 장수마을 사례
 - 2) 아파트에도 공동체를: 성북절전소와 동행(同幸)계약서
4. 보다 나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과제
 - 1) 사회적경제의 운동장을 만들자: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 2) 사회적경제와 마을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 마을공동체 부활의 길 | 마을민주주의

이 글의 목적은 마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성북구가 실천해온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융합·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대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신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시민의 요구와 바람에 중심을 두는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힘이 광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민적 여망의 실현을 중앙 정부에만 맡겨둘 수도 없다. 시민 삶의 공간인 마을과 동네에서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노력이 중앙 정부 단위에서 이뤄지는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과 균형을 이룰 때만 명실상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가 가능하다.

중앙권력에서 현장권력으로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 유치 등의 부동산 개발 정책에 치우쳐 있다. 게다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경제를 세계 시장 기준에 맞춰 재편하면서, 지역 고유의 시스템은 사라지고 세계경제 변동에 지역경제가 쉽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그들 경제의 활력은 세계시장 뿐 아니라 지역순환 경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공동체의 가치, 공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경제가 지역 경제 영역에서 지역 사회의 가치를 높여주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중앙권력'을 지역주민 중심의 '현장권력'이 대체해야 한다. 여기서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그들과 보조를 맞추는 민관 거버넌스 체제가 올바른 방향이다. 민간부문의 시민 단체, 시민 모임을 지방 정책 결정과 실행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들이 행사하는 현장 권력을 존중하고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춘 후에야 내실 있는 지역 자치를 이뤄낼 수 있다.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융합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연계는 앞서 언급한 '현장권력'이 주도하는 지역 자산에 기반한 발전 패러다임의 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역 특성과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 자산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와 방법을 지역 주민 내지 시민 모임의 참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물리적인 재개발 위주 도시 정책에서 벗어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둔 도시재생 사업의 전개는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들에게 다양한 사업 모델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사회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도시재생 사업과 융합해 지역순환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시대 민주주의는 마을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인 마을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삶과 깊이 관련된 각종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생활 속의 크고 작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결사체를 통해 이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프랑스 귀족 출신의 정치이론가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고전적 명저인 <미국 민주주의>에서 자치, 배심제와 함께 결사체 활동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보았다.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한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은 루소를 거쳐 토크빌로 이어지는데 그에게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보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더 가까울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율과

참여,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기능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데서 나오는 강한 일체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민과 필요를 함께 나누며 참여와 협력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는 마을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 마을민주주의 거버넌스를 위한 토대 구축

성북구는 과거 종로, 동대문 등 사대문 안의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 배후 베드타운으로 자리 잡았고, 뉴타운 사업이 가장 먼저 시행된 곳이기도 하다. 뉴타운 사업은 무조건 갈아엎고 네모반듯한 새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허름한 단독 주택들을 밀어내고 큰 길도 내며 깨끗한 아파트들이 올라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웃과의 정은 사라지고 일상적인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새 아파트가 들어섰음에도 지역 시민들 다수가 여타 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 지역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은 여전히 기대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북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수요자와 과제 중심의 협업 체계

성북구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 혁신에서 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미 2012년 7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고, 2016년 1월에는 마을민주주의과를 신설했다. 도시 재생 분야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시민참여형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해 행정조직을 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협업이 일상화되는 조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16년 3월 마을재생기획단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세부 업무별로 담당 부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새로운 행정 수요, 특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분야의 협력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담당관에 있던 마을사업팀과 2012년 7월에 신설한 사회적경제과를 합쳐 '마을사회적경제과'로 재편하고, 주거 정비,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도시재생 업무를 '도시재생디자인과'로 통합했다. 신설된 마을재생기획단은 재개발·재건축에서 흔히 있는 전면 철거를 통한 물리적 재생이 아닌 지역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주요 업무로는 복지, 일자리 등 지역순환형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경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협동조합과 공유경제 및 마을 만들기 지원 업무,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도시 경관 및 특화 거리 조성,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민간 파트너와 협업

국가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시민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사익과 권력 정치의 시대가 가고 공공성의 시대, 마을의 시대, 생활정치 시대가 도래했다. 정치·경제·사회의 주체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시민이 참여해 시민생활을 책임지는 마을 시민의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도 민간 부문의 파트너가 핵심이 되었다. 성북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모임인 '함께살이 성북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민관 협치 체계를 갖추었다. 사회적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 센터를 설치했고, 함께살이 성북 사회적협동조합에 이를 위탁해 운영을 맡겼다.

기존의 3개 중간 지원 조직, 사회적 기업 허브 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단,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또한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사회적경제 주체들뿐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직접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며 성장하는 민관 합동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민간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고 자립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또 다른 경험을 축적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앞서 소개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행정부문의 '마을재생기획단'과 민간부문의 '함께 살이 성북 사회적 협동조합'이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현안 문제를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민관 거버넌스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 외에 법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난해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관련 사항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필수적인 법임에도 무산되고 말았다. 모법이 없는 조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북구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사회투자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노력했다.

또한 2012년 7월 전국 최초로 공공조달부문에 사회적 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 단체가 만든 상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활성화하였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정무역, 공유경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조례와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등 9개의 개별 조례를 모두 지차체 조례로 입법해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융합과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와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 성북구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

마음이 모여 만드는 마을: 장수마을 사례

성북구 내 '장수마을'은 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어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곳이다. 한양도성의 구릉 지형으로 국공유지가 많고 25년이 넘는 노후주택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장수마을은 노후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전형적인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과 환경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개인이 기존 주택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주거환경 보전·정비 방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장수마을은 근현대 저층 주거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최적의 지역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에는 '동네목수'라는 마을기업이 중심이 되고 마을박물관, 사랑방, 마을카페 등이 자리 잡아 마을 시민들이 주요 의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적 실천이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 더해 '대지를 위한 바느질'이라는 사회적기업은 장수마을 시민들과 함께 마을예식을 진행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도 사회적경제가 마을에 녹아든 사례라 말할 수 있다.

아파트에도 공동체를 : 성북절전소와 동행(同幸)계약서

'갑(甲)의 횡포'는 각종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을 중의 을(乙)'이 아파트 경비원이다. 그런데 아파트 거주율이 60%에 육박하는 성북구에서 2015년 특별한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관내 112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 만든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선언문'이 그것이다.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 이 선언문에는 △인력 감축 자제, △젊은 경비원 채용 자제, △경비업무 외 잔업 최소화, △경비 근무 환경 개선, △정년 70세로 연장(현행60~65세), △퇴직금 보장 등 6개의 실천 조항이 담겼다. 사회에서 주종관계 같은 갑을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선언과 실천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실 이 같은 상생 방안은 관리비 인상으로 직결되어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북구 시민들은 상생하는 동행을 추구하였다. 휴식 시간을 늘림으로써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용역업체가 아닌 경비원 직접 고용으로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의 유희 주차장 공유로 바뀐 수익을 내기도 하고, 주차장 조명과 가로등을 LED로 바꾸는 절전소 활동에 대해 구에서 지원해주고 관리비를 절감하기도 하였다. 특히 기존 계약서상의 '갑'과 '을' 대신 '함께 행복하자' 뜻의 '동(同)과 '행(幸)을 사용하여 공정한 계약 관계를 만든 '동행(同幸)계약서'는 성북형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 보다 나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과제

사회적경제의 운동장을 만들자: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법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완하는 대안적 정책이라며 찬성의 뜻을 나타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시장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장의 가치에 경도된 분들에게는 놀라운 사실일지 모르지만 사실 시장은 자율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도 없다. 경제인류학자 칼 폴라니가 지적한 바 있듯이 사회의 규제로부터 벗어난 자율적 시장은 '악마의 맷돌'처럼 사회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몰아닥친 신자유주의 물결을 통해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몸소 체험하지 않았는가.

사회적경제는 사적 이윤 추구 활동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공익 증진과 사회 통합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동 영역이다. 게다가 재벌중심·성장만능 경제체제의 폐해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를 개선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이들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안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

사회적경제와 마을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사회적경제 분야는 짧은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과 결합해 그 발전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중앙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만큼이나 시민사회의 역량 또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사회적경제와 마을민주주의의 결합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적경제와 마을민주주의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 의식과 역량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묶을 수 있는 각종 모임, 집단, 단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각양각색의 자발적 결사체는 잠재적 소비 시장이자 생산 시장이 될 수 있다. 마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풀뿌리 시민 모임은 사람들이 생활 영역에서 대면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마을이라는 생활단위에서 어떻게 더 많은 작은 모임들을 만들고, 어떻게 그 모임들을 사회적경제와 마을민주주의로 연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더 나은 마을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있다.

